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2005

법 무 부

머 리 말

북한은 2004년에 들어 4월에는 형법을 개정하였고, 5월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데 이어 6월에는 그 동안의 비밀주의를 탈피하고 북한법전(대중용)을 발간하여 공개하는 등 형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최근 북한의 핵문제와 경수로사업 중단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의 본격 가동, 금강산 육로관광의 확대 등을 통하여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북한 형사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남북한 형사법의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고 우리 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초가 되며, 나아가 남북한 사법·법률통합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자료집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관련된 업무와 연구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법무부 법무실장

목 차

I. 북한형사법제 개요	1
1. 본질과 사명	1
2. 기본원리	2
가.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	2
나. 집단주의 원칙	3
3. 주요 특징	4
가. 김일성·김정일 교시·노동당 정책의 최고법규성	4
나. 인권보장제도 미비	5
다. 비법률가의 광범위한 재판 참여	5
라. 심급·사물관할의 변태적 운영	6
마. 민·형사절차의 미분화	6
바. 형사법 현실의 불투명	7
II. 형 법	8
1. 제·개정 경과	8
가. 1950. 3. 3. 형법 제정(총 2편 23장 301조)	8
나. 1974. 12. 19. 제1차 개정(총 5편 17장 215조)	8
다. 1987. 제2차 개정(총 8장 161조)	8
라. 1999. 제4차 개정(총 8장 161조)	9
마. 2004. 4. 29. 제5차 개정(총 9장 303조)	9

2. 주요 개정 내용 분석 및 평가	10
가. 개 요	10
나. 제1장(형법의 기본)	11
다. 제2장(일반규정)	12
라. 제3장(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13
마. 제4장(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5
바. 제5장(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15
사. 제6장(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19
아. 제7장(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21
자. 제8장(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21
차. 제9장(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22
 III. 형사소송법	23
1. 제 · 개정 경과	23
가. 1950. 3. 3. 형사소송법 제정(총 25장 281조)	23
나. 1976. 1. 10. 제3차 개정	23
다. 1992. 1. 15. 제4차 개정(총 10장 305조)	24
라. 1999. 9. 2. 제8차 개정(총 10장 305조)	24
마. 2004. 5. 6. 제9차 개정(총 12장 439조)	24
2. 주요 개정 내용 분석 및 평가	25
가. 개 요	25
나.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본)	26
다. 제2장(일반규정)	26
라. 제3장(증거)	27

마. 제4장(번호)	28
바. 제5장(관할)	28
사. 제6장(수사)	28
아. 제7장(예심)	29
자. 제8장(기소)	30
차. 제9장(제1심 재판)	30
카. 제10장(제2심 재판)	31
타. 제11장(비상상소심과 재심)	32
파. 제12장(판결, 판정의 집행)	33
 IV. 남북한 형사소송법 대비	34
 V. 개정 북한형법	103
 VI.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157

I. 북한형사법제 개요

1. 본질과 사명

- 북한에서 법이란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수단이고, 혁명에서 싸워 이겨 얻은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형사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함
 - 북한에서 최고의 규범력을 가진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교시,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선노동당의 혁명노선과 결정들이 헌법과 형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상위규범으로 기능
 - 북한 형사법제도는 사회주의체제를 나라의 안과 밖의 모든 반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모든 주민들을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을 맹종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그 존재 의의를 가짐
-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장,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법절차의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남한의 형사법제도와는 그 본질과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죄형법정주의의 미비, 형사재판의 목적달성을 위한 노동당의 지도, 인민대중의 재판절차에의 참여, 현지공개재판, 증거능력의 제한 철폐 등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고 있고, 수사기관, 예심기관, 검찰소, 재판소는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상호 보충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적 협력관계를 유지

2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 사회주의헌법 제62조 내지 제86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9조의 “신소·청원권”, 제79조의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등”, 제158조의 “공개재판과 변호권 보장” 등과 형법 제6조의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만 형사책임 부과”, 제9조의 “소급효 금지” 및 형사소송법 제4조의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 보장”, 제5조의 “인권보장”, 제98조의 “강압적 수사의 제한과 자백의 보강법칙” 등 형사법의 일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실에서 법집행 여부와 그 실효성은 의문

2. 기본원리

가.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

- 사회주의헌법 제5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고, 선거한 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 원칙과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절대복종함으로써 집단지도체제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중앙집권제’ 원칙을 결합
- 인민의 대표인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구성되는 재판소와 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 소장과 판사, 인민참심원,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모두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동일하고, 판사들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 다만, 중앙검찰소장 등 검사는 판사와 달리 최고인민회의와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하는데, 이는 선거제 구성원의

요건인 대의원 자격과 무관하게 당성이 충실한 법률적 전문가를 직접 임명함으로써 검사에 대하여 판사에 비하여 범죄의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국가법 준수상태의 감시, 국가기관의 결정·지시 등의 준수상태 감시에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

- 모든 권한을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통합시켜 그 대의원들을 모든 행정 및 사법기관에 파견하여 간접적으로 모든 정권기관을 장악하며, 중앙재판소 등 사법기관은 그 상급기관, 최고인민회의, 노동당 등 중첩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제한적 수임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제한
- 결국, 법관의 신분보장이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직무상의 독립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으며, 중앙재판소 등 사법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의 정책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적 집행기관에 불과하므로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은 인정될 여지가 없음

나. 집단주의 원칙

- 사회주의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는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단주의 원칙’을 천명
- 공민의 권리는 前국가적인, 對국가적인 기본권 또는 인권이

4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아니라 집단인 국가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성이 인정되고,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공민의 권리는 동시에 그것이 공민의 의무가 되므로 개인이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방어하고 나아가 국가에 대하여 그 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할 여지가 없음

- 결국, 사회주의헌법은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주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실질적 의미와 내용은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형사법의 내용이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치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님

3. 주요 특징

가. 김일성·김정일 교시·노동당 정책의 최고법규성

- 북한에서도 사회주의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나 모든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노동당 강령과 규약 및 이를 구체화한 노동당의 사법 정책이므로 형사법의 법규범성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짐
- 북한에서 형사법은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권리와 이익,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의 가치와 질서를 모든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적 성격과 범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인민들에 대하여 사회주의 법질서와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사회적 교육기능을 강조

나. 인권보장제도 미비

- 개정 형법에서는 법률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유추해석의 허용원칙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여전히 애매모호하고 추상적·불명확한 규정이 많은 점, 사회주의 형법의 사명과 본질에 따라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님
- 범죄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피심자·피소자에 대하여 구인·구금·구류·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경우에 판사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검사의 승인만으로 충분하므로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를 미채택
- 과학적·객관적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강압적 수사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한편,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등 일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석·구속적부심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전문법칙 배제 등 적정절차 원칙이 미비되어 있으며, 재판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강제처분을 채택·존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하여 인권보장에 한계

다. 비법률가의 광범위한 재판 참여

- 법률전문가가 아닌 근로인민 중에서 인민참심원을 선출하여 재판에 관여토록 하고, 재판소 판사를 선거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주체사상과 당성에 충실한 근로자이면 누구나 판사나 인민참심원이 되어 직접 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6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준비절차 및 재판단계에서 정치사업의 일환으로 현재료해, 현장검증 등 현지재판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소송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 사건의 심리절차에도 노동자, 농민대표를 직접 참여시켜 군중재판으로 운영

라. 심급·사물관할의 변태적 운영

- 1심관할에 대한 뚜렷한 관할분배의 기준이 없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재판소인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 재판소가 제1심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짐
- 상급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을 상급재판소로 이송하거나 동급의 다른 재판소로 이송토록 요구할 수 있어 국민의 상소권을 무제한으로 박탈하고 정치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관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

마. 민·형사절차의 미분화

-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보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한편, 손해보상청구가 기각당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동일사건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
-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그 사실이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형사사건의 재판소를 기속하도록 하여 사실인정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
- 검사는 국가·사회·공민의 이익을 위해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예심원은 범죄행위로 입은 국가 등의 재산상 손해보상을 위해 보상책임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바. 형사법 현실의 불투명

- 2004년 6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총 112개의 법률이 수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을 발간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며, 이 법전의 서문에서 “법은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다. 국민들이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전을 편찬하여 발행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동안 법률, 특히 형사법률에 대한 비밀주의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개정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법률주의의 선언, 유추해석 허용규정의 삭제, 범죄구성요건의 구체화, 형사소송절차의 세분화와 체계화 등 인권보장절차에 있어서 일부 개선된 내용이 포함
- 그러나, 국제인권기구의 인권보고서 내용,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의 주장, 북한 법현실에 대한 공개자료, 탈북자들의 증언내용 등에 의하면 북한사회의 현실에서는 형사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능

II. 형 법

1. 제·개정 경과¹⁾

가. 1950. 3. 3. 형법 제정(총 2편 23장 301조)

- 1945. 11. 16. 북조선사법국포고 제2호 ‘북조선에 시행될 법령에 관한 건’을 통해 식민통치를 위한 제반법률의 효력을 정지
- 1950. 3. 3.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구소련법을 모방하여 형법의 유추해석과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
- 사회주의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형범죄가 50여개에 이르는 등 권위적이고 잔혹한 형벌이 특징

나. 1974. 12. 19. 제1차 개정(총 5편 17장 215조)

- 반혁명범죄에 대해 사형 및 전 재산몰수 부과 등 가혹한 진압과 형벌을 강화

다. 1987. 제2차 개정(총 8장 161조)

- 세계적인 탈이데올로기 추세와 대내외의 비판을 의식하여 전근대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반혁명범죄’를 ‘반국가범죄’로 용어를 수정하고 유추해석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적용요건을

1) 북한 형법은 그 동안 1950년 제정된 이후 1974년, 1987년, 1995년, 1999년, 2004년 등 총 5차에 걸쳐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에 수록된 형법은 “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1990년에도 한 차례 개정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개정인 1995년 형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미확인되고 있는 점도 위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화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형벌을 완화하는 등 인권보장 측면에서는 외형상 보다 진일보된 면을 갖추

- 1995년 제3차 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보충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확인

라. 1999. 제4차 개정(총 8장 161조)

- 손해보상기관으로 예심원을 추가하는 등 총 48개 조문에 걸쳐서 개정하였으나, 기본 골격은 1992년 형사소송법 체계를 유지
- 제1장 형법의 기본, 제2장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 제3장 반국가범죄, 제4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제5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제6장 국가의 일반행정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7장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8장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구성

마. 2004. 4. 29. 제5차 개정(총 9장 303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총 9장 303개 조항으로 전면개정된 것으로 사회주의 형사법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국가범죄·군사범죄·사회주의문화제도에 관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죄형법정주의 도입과 구성요건의 구체화, 노동단련형의 도입, 사법기관의 불법행위 처벌강화, 단순월경자의 처벌완화 등을 통한 인권보장적 측면과 시장경제질서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경제범죄 관련 조항을 다수 신설한 것이 특징
- 2002. 7. 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그에 따른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변화된 사회경제환경을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인권보장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10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대외개방에 수반하여 주민사회에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국가범죄와 사회주의문화·제도 유지를 위한 관련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 제1장 형법의 기본, 제2장 일반규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죄,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죄,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죄,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죄,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죄, 제9장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죄로 구성

2. 주요 개정 내용 분석 및 평가

가. 개 요

- 북한 형법은 1987년 제2차 개정을 통해 전면 개정한 이후 그 기본원칙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다가 2004년 총 9장 303개 조항으로 그 내용을 대폭 개정²⁾
- 종전과 달리 각 조문마다 제목을 붙임으로써 조문체계를 명확히 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였던 구성요건을 기본형식과 가중형식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형벌의 종류와 내용도 구체화
- 제4장(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을 신설하여 추가함으로써 총 8장에서 총 9장으로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범죄를 신설한

2) 기본형식이 종전과 동일함에도 전체적으로 조문이 많아진 것은 형사처벌하는 범죄를 신설한 것과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을 체계화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유추해석원칙을 삭제하고 형벌법률주의를 도입함으로써 범죄유형과 처벌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것으로는 경제관리질서 침해범죄(56개 조항), 사회주의문화·공동질서 침해범죄(30개 조항), 일반행정질서 침해범죄(11개 조항) 등이 대부분이고, 범죄와 형벌 일반규정은 14개 조항이 증가

나. 제1장(형법의 기본)

- 형법의 사명(제1조), 노동계급원칙에 따른 범죄자 처리(제2조) 등 사회주의 형법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
- 제6조(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를 신설하여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종전 제10조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유추해석 허용원칙을 삭제함으로써 형법규정 형식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법률주의를 도입
- 북한이 1950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계속 유지하였던 유추해석의 허용원칙을 삭제하고 형사책임 법률주의를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위와 같은 사회주의헌법 및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장, 적법절차 원칙, 책임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적 입헌국가에서의 죄형법정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음³⁾

3) 북한은 1950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유추적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였다가(제9조), 1987년 개정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에 일정한 요건과 제한을 부가하였다(제10조). 한편, 중국은 1979년 제정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을 허용하였으나 1997년 개정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을 금지하였다(제3조).

다. 제2장(일반규정)

- 제1절(범죄)은 12개 조항을 17개 조항으로 확대하였는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제14조), 피해자의 사전요구에 의한 범행(제17조), 가족·친척에 대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제18조), 특수적 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제23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형사책임의 요건과 정도를 구체화
- 제2절(형벌)은 23개 조항을 32개 조항으로 확대하였는데, 형벌의 종류를 “사형, 노동교화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의 5개에서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의 8개로 세분화함으로써 노동교화형을 무기와 유기로 구분하고 노동단련형을 신설하였으며,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을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으로 분리하였으며(제27조),⁴⁾ 형벌양정에 있어서 감경사유를 확대하고(제40조), 형벌의 가중감경범위(제41조)·범죄의 병합조건과 양정(제43조, 제44조)·사회적 교양처분과 양정(제49조, 제50조)·공소시효의 세분화(제56조) 등 형집행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

4) 종전에는 노동교화형 기간이 6개월부터 15년까지였으나, 유기노동교화형을 1년부터 15년까지로 하였으며(제30조), 노동교화형은 공민권이 정지되고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한편, 노동단련형은 그 기간이 6개월부터 2년까지로서 그 기간 동안 공민권이 보장되나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제30조, 제31조).

※ 인권보장기능을 강화

- 형법은 형벌의 종류와 형집행의 방법과 기준을 세분화하였는데, 종래 기본형벌로 기능하였던 노동교화형을 무기와 유기로 구분하여 종신자유형을 도입하였으며, 노동단련형을 도입하여 2년 이하의 자유형은 기본형벌을 노동단련형으로 대체⁵⁾
- 또한, 형의 집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적 교양처분의 요건과 형벌양정, 형의 만기전 석방, 공소시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형벌을 완화함으로써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자구행위를 금지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범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에 해당

라. 제3장(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 제1절(반국가범죄)에서는 반국가적 목적의 정변·폭동·시위·습격행위와 조국배반의 투항, 변절, 비밀누설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제59조, 제62조, 제63조) 선전선동행위의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을 완화함으로써(제61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그 법정형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강화

※ 중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국가전복을 위한 “무장폭동”뿐만 아니라 정변, 폭동, 시위, 습격행위도 처벌하고 그 법정형의 상한을 삭제하였고, 주관적 구성요건도 “반국가적 목적”으로

5) 형법에서 규정하는 총 245개 처벌조항 중에서 170개 조항에서 노동단련형을 규정하여 기본형벌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의 노동력을 국가경제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애국적 인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민에 대한 테러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 또한, 선전선동의 내용을 불문하고 반국가적 목적인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며,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조국반역죄로 처벌하도록 규정. 다만, 테러죄에 있어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등 일부 법정형을 완화한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 제2절(반민족범죄)에서는 민족반역죄의 법정형을 “사형 및 전재산몰수”에서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으로 완화하는 (제67조) 한편, 외국인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제69조)
- ※ 민족반역죄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전재산몰수형”으로 하고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및 전재산몰수형”으로 규정하던 것을 기본형을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으로 하고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으로 규정하여 처벌 정도를 완화. 조선민족적대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반민족범죄에 대해 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등 일부 처벌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구성요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법정형을 하향 조정한 것이므로 처벌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3절(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불신고·방임죄)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조정한 것으로 그 기본내용은 그대로 유지(제70조 내지 제72조)

마. 제4장(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군사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국방위원회의 결정·명령·지시 집행태만죄(제73조), 군사시설파괴죄(제75조, 제76조), 무기 등 불법휴대·양도죄(제78조), 군사복무동원기피죄(제83조), 국방비밀누설죄(제88조) 등 총 16개 조항으로 규율
- 그 대신 종전에 제6장 제1절(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서 군사에 관한 범죄로 규정하였던 총 6개 조항은 삭제
- 종전에 군사에 관한 중요범죄를 ‘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서 개별적으로 규율하였으나, 이를 체계화하여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여 국방위원장의 결정·명령·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민간인의 군사범죄를 확대하고 군수품에 대한 범죄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법정형에 가중처벌을 확대함으로써 처벌을 강화
- ※ 형사소송법은 군사범죄에 대한 수사과 예심에 있어서 특별수사·예심기관인 군사검찰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군사범죄에 대하여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를 설치. 이와 같이 군사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것은 북한이 최근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론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바. 제5장(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 제1절(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은 국가재산에 대한 범죄로서 그 기본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재산공갈죄를 신설하고, 특히 대량재산에 관한 범죄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으로 엄중히 가중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다소 강화(제91조)

- 제2절(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은 종전의 18개 조항을 74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전면개정한 것으로 증권위조·위조 증권사용죄(제101조, 제102조), 탈세죄(제108조), 법인가장 경제거래죄(제112조), 상표권침해죄(제113조), 거간죄(제114조), 수출입질서위반죄(제117조), 고리대죄(제118조), 불법외화벌이죄(제125조), 계약규율위반죄(제131조), 상품공급및판매질서위반죄(제156조, 제157조), 밀주죄(제159조, 제160조), 가격사업질서위반죄(제170조)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다수 신설하거나 구체화
- 제3절(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과 제4절(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은 그 기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의적 해고·전보죄(제189조), 분배질서위반죄(제190조), 미성년에게 노동을 시킨 죄(제191조) 등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다소 높임으로써 형사처벌을 강화

※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의 수호를 위한 체제단속 강화

- 북한은 형사법의 사명과 기본원칙으로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노동계급에 바탕을 둔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경제분야에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원칙으로 수호한다는 것을 강조
- 즉, 인민계획경제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책임일군의 불법적 행위를 세분화하여 처벌하고,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한 죄,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건설죄, 비법적 경제관리죄, 품질감독질서위반죄, 실리없는 시설건설·기계설비제작죄,

국가소유 살림집의 비법적 거래죄, 주체농법위반죄, 양어·양식질서위반죄, 상품공급·판매질서위반죄, 가격사업질서위반죄 등을 신설하거나 구체화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할 것을 보다 강조

- 이는 북한이 경제분야에서의 개방개혁정책과 식량난 등에 따른 주민생활의 새로운 변화상을 반영하면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수호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경제개방개혁은 이러한 범위와 한계 내에서만 추진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경제개방에 따른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대처

- 형법은 경제범죄에 관하여 가장 많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즉, 외화관리질서위반죄, 비법적인 외화거래·외화벌이죄, 외화원천동원죄 등 불법적인 외화거래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탈세죄, 비법적 상행위, 법인가장 경제거래죄, 상표권침해죄, 거간죄, 고리대죄, 노력착취죄 등 탈세·상표·불법적 폭리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개방개혁으로 인한 대외개방으로 인하여 외국과의 교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주민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거래·경제활동이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통제의 이완에 따라 사회현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
- 이러한 범죄들은 종전의 사회주의체제와 계획경제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외환거래, 상업적 거래 등 시장경제질서에서 비롯되는 요소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영리목적의 상행위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한 이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이에 따른 각종 개방개혁정책에 따라 북한의 경제생활의 변화를 반영하여 합법적인 상행위와 그 결과물인 개인소유의 재산권은 보호하되, 비합법적인 상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것만으로 북한이 안정적인 개방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경제악화로 인한 주민생활의 현실을 반영

-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유형을 규정하거나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되는 식량난 등 경제악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 즉, 기관·개인의 밀주죄, 생산제품의 비법처분죄, 난방열 도용죄, 주민연료 공급질서위반죄 등 경제범죄를 새롭게 신설하는 한편,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의 요건과 처벌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경제범죄 이외에도 군수품을 팔고 산 죄, 국가재산 약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자의적인 해직죄, 분배질서위반죄, 미성인에게 노동을 시킨 죄, 사례금·이득금을 바치지 않은 죄 등 새로운 범죄형태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도 물자와 자원의 부족 등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주민생활이 한층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사. 제6장(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 종전의 6개 조항을 26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전면개정한 것으로 컴퓨터망침입죄(제201조), 정보파손죄(제202조), 허위정보입력유포죄(제203조) 등 컴퓨터관련 범죄를 신설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노동단련형이 아니라 중벌인 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
- 사회주의 문화를 해치는 범죄로서 퇴폐행위죄(제194조), 불량약품·의료기구 생산죄(제210조), 사람장기 등 매매죄(제214조), 가짜의약·식료품 제조·판매죄(제215조), 마약밀수·밀매죄(제218조) 등을 신설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반국가목적이 없이 북한을 반대하는 방송을 듣거나 유인물 등을 수집, 보관,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제195조)

※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사회주의 문화·공동생활을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유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즉, 종전에는 전혀 규정하지 않았던 컴퓨터관련범죄를 새롭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컴퓨터망침입죄, 정보파손죄, 허위정보입력유포죄 등을 신설하고, 퇴폐적인 문화반입·유포·행위죄에 있어서 유연성자기원판(플로피디스크), 씨디롬(CD) 등 정보화매체를 범죄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퇴폐행위는 물론 불량약품·의료기구생산죄, 위생방역사업태만죄, 국경검역을 무책임하게 한 죄, 사람의 장기·태아·혈액 등 취득·매매·이용죄, 가짜의약품·식료품 제조·

판매죄, 마약밀수·밀매죄 등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범죄와 역사유적도굴·밀수죄 등을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로는 패싸움죄,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거짓행세죄, 칭호참용죄, 미신행위·조장죄, 실력행사죄, 비법혼인죄, 엄중한 결과발생 방임죄 등을 신설하거나 세분화하여 규정

- 이와 같이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대외개방과 경제적·현실적 이유에 기인한 사회질서의 이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경제·사회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음란·퇴폐 등 외래문화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주민사회에 유입되고 있어 매음행위·미신행위 등이 사회문제화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⁶⁾
- 특히, 반국가목적 없이 북한을 반대하는 방송을 듣거나 유인물 등을 수집, 보관, 유포하는 행위와 반국가목적 없이 국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을 꾸며냈거나 퍼트린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외부정보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이러한 현상은 대외개방 등에 따른 사회의 이완분위기에 대처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문화·공동생활을 유지할 목적으로 주민생활의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6) 컴퓨터범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북한사회에 컴퓨터가 비교적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은 극히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신행위죄에 대하여도 이는 탈북자들의 증가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기독교 등 외래종교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 제7장(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 종전의 28개 조항을 39개 조항으로 확대한 것으로 군사에 관한 범죄를 제4장으로 재편한 것을 고려할 때 대폭 개정한 것으로 평가
- 법일꾼의 불법체포·구속죄(제252조), 사건과장·날조죄(제253조), 비법석방죄(제254조) 등 법일꾼의 직무집행관련 범죄를 신설하거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증인협박죄(제237조), 직무집행자에 대한 복수죄(제238조), 부당한 신소죄(제244조), 판결과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제256조) 등을 신설하여 사법제도와 관련된 범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처벌범위를 확대
- 그 밖에도 일반행정질서와 관련하여 출판질서위반죄(제226조), 과실적 비밀누설죄(제231조), 대외적 권위를 훼손한 죄(제245조), 관리일군이 아닌 자의 뇌물죄(제242조), 증명서매매죄(제225조), 허위날조·유포죄(제222조) 등을 신설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 비법국경출입죄(단순탈북자)에 대해 “국경을 넘는 자”를 “국경을 넘나든 자”로 개정하고, 형량을 종전의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완화하여 주민들의 탈북사태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자. 제8장(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 종전의 10개 조항을 20개 조항으로 확대한 것으로 매음죄(제261조), 음탕행위죄(제262조), 비법혼인죄(제270조), 미신행위·조장죄(제267조, 제268조) 등 음란·풍속에 관한 범죄를 확대·강화하여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

22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 패싸움죄(제259조), 검열원·감독원 등 거짓행세죄(제264조), 칭호참용죄(제265조)·권리의 실행행사죄(제269조), 공무원이 사례금 및 이득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은 죄(제274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제277조) 등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범죄에 대한 규정을 신설

차. 제9장(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 제1절(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은 종전의 14개 조항에서 18개 조항으로 확대하였으나 그 기본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살인죄를 고의적 중살인죄, 고의적 경살인죄, 과실적살인죄 등으로 세분하고(제278조 내지 제282조), 상해죄를 고의적 중상해죄, 과실적 중상해죄, 고의적 경상해죄 등으로 보다 세분화(제283조 내지 제287조)
- 제2절(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은 그 기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개인재산을 빼앗은 죄와 개인재산 공갈죄를 구분하고(제297조, 제298조), 특히 대량재산에 대한 범죄 등 정상관계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제301조 등)

III. 형사소송법

1. 제 · 개정 경과

가. 1950. 3. 3. 형사소송법 제정(총 25장 281조)

- 1945. 11. 19. 북조선행정 10국에 사법국을 조직하여 소련의 사법제도 도입작업 시작, 포고 제4호(재판소 조직에 관한 건), 제5호(검찰소 조직 내지 설치에 관한 건) 공포로 인민재판소 · 인민검찰소 등 설치
-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고, 국가 · 사회재산을 옹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당의 사법정책 관철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서 형사소송법을 제정
- 제1차 개정(1954. 6. 15), 제2차 개정(1954. 12. 11)을 통하여 공산주의체제 강화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행의 무기로서 재판 및 검찰기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소법정주의와 피해자에 의한 사소(私訴)제도 인정

나. 1976. 1. 10. 제3차 개정

-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채택에 따른 개정으로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로 개칭, 판사의 재판에 대한 독립규정 삭제, 중앙재판소의 최고인민회의 등에 대한 책임규정 신설 등 헌법개정 내용을 반영
- 증거능력 제한 및 자백의 증명력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소 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재판소의 직권에

의한 형사소송절차 개시를 허용하는 등 전근대적 요소를 다수 포함

다. 1992. 1. 15. 제4차 개정(총 10장 305조)

- 세계적인 탈이데올로기 추세와 대내외의 비판을 의식하여 전근대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소추주의, 기소편의주의,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규정하여 인권보장 측면에서는 외형상 보다 진일보된 면을 갖추
- 제5차 개정(1995. 4. 12), 제6차 개정(1996. 1. 19), 제7차 개정(1997. 9. 17)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정·보충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확인

라. 1999. 9. 2. 제8차 개정(총 10장 305조)

- 손해보상기관으로 예심원을 추가하는 등 총 48개 조문에 걸쳐서 개정하였으나, 그기본골격은 1992년 형사소송법 체계를 유지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일반규정, 제3장 증거, 제4장 수사와 예심, 제5장 기소, 제6장 변호, 제7장 재판, 제8장 제2심 재판, 제9장 비상상소와 재심, 제10장 판결·판정의 집행으로 구성

마. 2004. 5. 6. 제9차 개정(총 12장 439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6호로 총 12장 439개 조항으로 전면개정한 것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의 관철 등 사회주의 형사법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형사소송절차를 소재목과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다 체계화하는 한편, 그

내용도 보다 구체화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권한을 통제하는 등 인권보장기능을 부분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

-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일반규정, 제3장 증거, 제4장 변호, 제5장 관할, 제6장 수사, 제7장 예심, 제8장 기소, 제9장 제1심재판, 제10장 제2심재판, 제11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제12장 판결, 판정의 집행으로 구성

2. 주요 개정 내용 분석 및 평가

가. 개 요

- 북한 형사소송법은 1950년 3월 제정(총 25장 281개조)된 이후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이르기까지 총 9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992년 제4차 개정(총 10장 305개조)을 통해 전면 개정을 한 이후 2004년에도 대폭 개정(총 12장 439개조)하였으나 그 기본원칙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
- 형법과 마찬가지로 종전과 달리 각 조문마다 제목을 붙임으로써 조문체계를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요건사실과 기간 등이 추상적으로 규정되거나 규정되지 않아서 수사기관이나 재판소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일정한 요건사실에 대한 사유·절차·기간 등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전체에 산재해 있던 관련 규정들을 소제목으로 구분하여 분류함으로써 이를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
- 제2장(일반규정)을 제1절 형사소송관계자, 제2절 형사소송에 관여할 수 없는 사유, 제3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제4절 형

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5절 형사소송의 중지, 제6절 형사사건의 기각, 제7절 사회적 교양처분, 제8절 손해보상, 제9절 형사소송문건, 제10절 형사소송기간과 문건송달, 소송비용으로, 제7장(예심)을 제1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 제2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3절 피심자의 심문, 제4절 체포와 구속처분, 제5절 검증, 제6절 감정, 제7절 수색과 압수, 제8절 증인의 심문, 제9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제10절 재산담보처분, 제11절 예심의 종결로, 제9장(제1심 재판)을 제1절 재판의 임무와 재판소구성, 제2절 재판준비, 제3절 재판심리,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5절 판결로 각각 세분화

나.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본)

- 종전의 6개 조항을 8개 조항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의 관철원칙을 유지하는 등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
- 형사소송법의 직접적인 사명을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서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 것으로 수정(제1조)

다. 제2장(일반규정)

- 종전의 28개 조항을 79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한 것으로 종전에는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공통되는 사항을 일정한 기준이 없이 평면적으로 나열하였고, 그 내용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였는데, 이번 개정작업을 통하여 이를 항목별

로 체계화하였으며 그 내용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제9조 내지 제87조)

- 형사소송관계자·형사소송에 관여할 수 없는 자·형사사건의 취급시작·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형사소송의 중지·형사사건의 기각·사회적 교양처분·손해보상·형사소송기간과 문건송달, 소송비용 등 소제목으로 분류하여 형사소송법에 산재해 있던 관련 규정들을 체계화하는 한편, 그 내용도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규정
- 즉, 형사소송에 관여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수사·증인·재판 등 사항에 따라서 구별하여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건처리의 기간 단축, 형사소송 중지절차의 유형화, 형사사건의 기각형식과 절차, 사회적 교양처분의 사유와 절차, 손해보상의 청구권자와 시기, 소송비용의 부담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라. 제3장(증거)

- 증거의 수집·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검사를 제외하였고(제93조), 증거의 고착에 있어서 사진·도면·녹음·녹화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진술서와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제95조)
- 증거물을 찾아낸 경우에는 2명의 입회인을 세우도록 하고(제100조), 특히 강압에 의한 진술강요의 금지와 자백의 보장 법칙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예심절차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종전 형사소송법 제93조, 제94조), 피심자는 물론 피소자에 대하여도 인정되는 것으로 확대(제98조)

마. 제4장(변호)

- 변호인의 선정시기를 사실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한하였으며(제110조), 변호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112조)

바. 제5장(관할)

- 수사·예심관할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은 안전보위기관, 일반범죄사건은 인민보안기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은 검찰기관에서 각각 담당토록 규정(제122조, 제124조)
- 철도 및 군사범죄에 대한 특별수사·예심기관에 대해서도 이를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 철도검찰기관, 군사검찰기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제123조, 제125조)
- 또한, 도재판소의 관할범위에 무기노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포함시킴으로써 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제127조)

사. 제6장(수사)

- 수사원이 수사사건을 이송할 경우에는 사건이송결정을 통하되 범죄자가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감결정을 하여야 하고, 해당사건과 관련없는 범죄자료도 함께 이송하도록 규정(제142조)
- 수사원·예심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예심감시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여 수사·예심에 대한 감시와 관련하여 검사의 지시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규정(제147조, 제156조)

아. 제7장(예심)

- 예심원은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조사를 금지시키고(제150조), 예심기간의 2차 연장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예심기간을 총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였으며(제152조, 제188조),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은 10일 이내에 예심을 끝내도록 제한(제151조)
- 피심자의 심문은 8시부터 20시 사이에만 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검사의 참가밑에 하도록 하였으며(제163조),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통고하도록 하고(제169조), 필요에 따라 피심자심문에 2명의 입회인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제172조)
- 예심원이 피심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의뢰결정서를 작성하여 체포영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제166조), 체포·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 이전이라도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인정하되, 10일 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지 못하면 이를 취소하도록 제한(제178조)
- 체포·구류구속처분은 원칙적으로 유기·무기노동교화형,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가능하며 노동단련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제179조). 특히, 체포영장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심원이 체포영장발급신

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어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승인하며, 체포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도록 제한(제180조, 제181조)

- 검증의 종류와 검진결정서의 작성(제193조, 제196조), 검증·검진의 시간제한(제197조), 심리실험의 사유와 절차(제202조, 제203조), 감정의 종류와 의뢰절차(제207조, 제209조), 증인에 대한 구인시간 제한(제227조), 재산담보처분의 시기와 범위의 제한(제246조, 제247조), 대질심문과 식별심문의 사유와 절차(제235조 내지 제243조)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자. 제8장(기소)

- 1999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이전에 검사가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처리하도록한 규정을 개정하여 사건기록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검토처리하도록 연장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다시 10일 안으로 검토처리하도록 단축(제262조)

차. 제9장(제1심 재판)

- 재판소의 임무와 재판소 구성에 관하여 재판소의 독자성 보장을 신설하여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그것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제272조), 재판정의 좌석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제280조)
- 피소자에 대한 재판을 위한 구류기간을 25일까지, 노동단련형의 경우에는 15일까지 각각 제한하고(제282조), 재판정에서는 피소자를 구속하지 않도록 제한하는(제283조) 한편, 제1심 재판소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으로 재판

심리를 끝내도록 하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차 10일, 2차 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제287조)⁷⁾

-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에 대한 검사의 감시를 강화하고(제288조), 기소추가에 시기에 대하여는 제1심 재판의 준비와 재판심리에서 가능하도록 하고(제334조), 기소변경의 시기에 대하여는 제1심 재판의 준비와 재판심리, 제2심 재판심리에서 가능하도록 이를 명확하게 규정(제337조)
- 제1심 재판에 있어서 재판조서작성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5일 안으로 이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제355조), 상소·항의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제361조)

카. 제10장(제2심 재판)

- 제2심 재판소가 상소, 항의된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을 종전의 1개월에서 25일로 다시 단축(제366조)⁸⁾
- 재판심리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된 부분으로 하고(제370조), 심리의 절차에 있어서 재판장의 재판심리시작과 함께 판결의 내용과 상소 등의 이유를 보고하고,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진술, 재판심리의 종결 등 절차규정을 구체화(제371조, 제372조)

7) 종전에는 1심 재판에 대하여 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하였다(제189조).

8) 1999년 형사소송법은 종전에 제2심 재판소가 상소, 항의된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을 종전의 2개월에서 사건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으로 처리하도록 단축하였다(구 형사소송법 제260조).

- 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로서 상소 또는 항의의 근거, 사실인정과 형법적용, 형벌의 적정성, 예심 또는 제1심 재판 심리에서의 절차준수 여부 등을 명확히 하고(제373조), 합의실에서 협의하여 판정을 한 경우에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읽도록 하고 검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제374조)

타. 제11장(비상상소심과 재심)

- 비상상소제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소의 제기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죄판결에 대한 비상상소는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제390조)
- 비상상소의 범위, 심리절차(제398조, 제398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판정에 대한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하며(제401조),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비상상소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 자에게 판정서등본을 송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제402조)
- 재심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판결·판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중앙재판소 소장을 통하여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제411조), 재심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제414조)
- 중앙재판소는 재심날자를 재판하기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제413조), 재심판정은 2일 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제418조), 재심에 대한 거부판정은 재심신청자에게 48시간 안으로 통지하도록 규정(제416조)

파. 제12장(판결, 판정의 집행)

-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형벌집행기관은 사형집행결과를 3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통지하도록 하고(제423조), 노동교화형 등 자유형에 있어서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하며,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형기계산의 기준을 명시(제425조)
- 선거권박탈형은 기본형벌집행 종료후 판결서 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지역 인민위원회가 담당하고(제426조), 자격박탈·정지형은 기본형벌집행 종료 후 판결서등본 등을 접수한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담당하며(제427조), 재산몰수형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소 집행원이 하되, 이 경우 2명의 입회인을 세우며 재산몰수목록을 기록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형벌의 집행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제428조)
-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재판소의 집행원이 하고(제429조), 재산임자가 재산몰수형,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허용(제430조)
- 그 밖에 형벌집행정지의 해제(제436호), 형벌집행 중이거나 형벌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제437조), 판결·판정집행과 관련한 신청의 심리날자 통지(제438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

IV. 남북한 형사소송법 대비

구분 항목	남	한
제 정 및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 9.23. 제정 ○ 61. 9. 1. 제1차 개정 ○ 63.12.13. 제2차 개정 ○ 73. 1.25. 제3차 개정 ○ 73.12.20. 제4차 개정 ○ 80.12.18. 제5차 개정 ○ 87.11.28. 제6차 개정 ○ 94.12.22. 제7차 개정 ○ 95.12.29. 제8차 개정 ○ 97.12.13. 제9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3. 3. 제정 ○ 54. 6.15. 제1차 개정 ○ 54. 12.11. 제2차 개정 ○ 76. 1.10. 제3차 개정 ○ 92. 1.15. 제4차 개정 ○ 95. 4.12. 제5차 개정 ○ 96. 1.19. 제6차 개정 ○ 97. 9.17. 제7차 개정 ○ 99. 9. 2. 제8차 개정 ○ 2004. 5. 6. 제9차 개정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칙, 제1심, 상소, 특별소송 절차, 재판의 집행 등으로 구성 ○ 5편 26장 49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소송법의 기본, 일반규정, 증거, 변호, 관할, 수사, 예심, 기소, 제1심재판, 제2심재판, 비상상소와 재심, 판결·판정의 집행 등으로 구성 ○ 12장 439조
배 경 이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민주주의 -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헌법 제10조 등 참조) ○ 권력분립주의(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103조 등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헌법 제150조) ○ 프롤레타리아 독재주의와 주체사상(헌법 제156조)
기 본 원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적 진실주의 원리 - 객관적 진실의 발견·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건 처리규범(제1조) -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절차를 엄격히 세움 -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 데 이바지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기 본 원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절차원리, 신속재판원리 - 공정·신속한 법정절차에 의한 형벌권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급노선의 관철과 이원적 범죄처벌의 원리(제2조) - 노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 - 반국가적 범죄: 적대분자·주동분자 철저히 진압, 피동분자 포섭 - 기타 범죄: 사회적 교양과 법적 제재 배합 ○ 군중노선의 관철(제3조) -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 ○ 과학성·객관성·신중성 보장(제4조) ○ 형식적 인권보장(제5조) - 인권보장을 선언 - 그 실효성은 의문 ○ 범죄예방원리(제6조) - 준법교양·법적 통제 강화 ○ 조선훈치 사용원칙(제7조)
주 요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의한 재판제도 ○ 보장적 기능 중시 ○ 철저한 인권보장제도 구현 -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 채택 - 무죄추정원칙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교시의 최고법규성(헌법 제3조, 제11조) ○ 보호적·교육적 기능의 강조(제2조, 제6조) ○ 인권보장제도의 미비 -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 미채택(제93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76조 내지 제191조 등 참조) - 무죄추정원칙 미채택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주 요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에 의한 재판제도 ○ 민·형사절차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상명령제도만 인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내지 제36조) - 민사재판의 확정사실은 형사소송에서 증거자료가 됨에 그치고, 이에 대한 증거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함(통설) ○ 심급제도의 철저한 보장 ○ 철저한 공판중심주의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제도 미채택 - 재판준비절차에서의 실체판단 불허 ○ 사법권독립의 실질적 보장 ○ 항고절차, 재판상 준기소절차 인정 ○ 재산담보처분제도 미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의 광범위한 재판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참심원제 및 재판원 선거제 채택(재판소구성법 제4조) - 현지료해, 현장검증 등 현지 재판 강조(제3조, 제286조, 제321조) - 일반대중의 심리관여(제286조) ○ 민·형사절차의 분리 불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소송절차에 손해보상청구 병합 제기(제70조) - 민사재판의 확정판결은 형사소송 기속(제77조) ○ 심급관할의 변태적 운영(제127조, 제129조) ○ 공판중심주의의 불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제도 채택(제124조, 제148조 이하) - 재판준비회의에서의 실체판단(제289조 이하) ○ 사법권독립의 형식적 보장 ○ 항고절차, 재판상 준기소절차 부인 ○ 재산담보처분제도 채택(제244조 내지 제253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준거법	○ 대응규정 없음	○ 형사사건의 준거법(제8조) - 수사·예심·검찰·재판기관의 형사사건 취급·처리하는 법에 규정된 원칙·절차·방법에 의함
일 반 규 정	○ 수사의 주체 - 검사가 수사주재(제195조) ○ 대응규정 없음 ○ 기소독점주의 채택(제246조) ○ 대응규정 없음 * 헌법 제12조에 보장 ○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제도(제198조의 2) - 불법구속의심 있으면 즉시 송치 명령 ○ 대응규정 없음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참조	○ 수사의 주체 - 해당기관의 수사원, 필요시 검사(제10조) ○ 예심의 주체(제11조) - 인민보안·검찰·안전보위·인민무력기관의 예심원 ○ 기소독점주의 채택(제12조) - 형사사건의 유일한 기소권자는 검사 ○ 불법 체포·구류 금지(제177조), 체포시 48시간 내 가족·소속단체에 체포날짜·이유 고지의무(제183조) ○ 검사의 불법체포·구류자 석방의무(제177조) ○ 사건기각사유(제53조) - 14세 미만자의 행위 - 저지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을 경우 - 형사소추시효기간의 도과 - 특사로 형벌이 면제되었을 때 -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행위일 때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일 반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 보호관찰법 참조 ○ 재판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사용(법원조직법 제62조 제1항) - 국어 이해득자에 대한 통역 필요(동조 제2항) - 국어에 통하지 못한 자, 농자·아자에 대한 통역필요(형소법 제180조, 제181조) - 국어 아닌 문자·부호의 번역 필요(제182조) ○ 대응규정 없음 * 법원조직법 제2조 참조 ○ 재판공개(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형사재판의 공개원칙 - 예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를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기일내에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한 경우 -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죽었을 경우 - 정신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사회적 교양처분과 그 취소(제62조 내지 제69조) ○ 재판용어(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어 사용 - 조선어 이해득자에 대한 통역 필요 - 외국인의 자국어 문서제출 허용 ○ 재판소에 의한 재판 및 판결에 의한 형벌적용(제13조) ○ 재판공개(제27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형사재판의 공개원칙 - 예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일 반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 헌법 제12조제4항 참조 ○ 대응규정 없음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25조 내지 제36조의 배상명령제도 참조 ○ 기간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제66조제1항 본문) - 일·월·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 불산입(제66조제1항 본문) - 년·월로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제66조제2항) - 공휴일에 해당하는 말일 불산입(제66조제3항 본문) * 시효와 구속기간에 대하여는 초일·말일 불산입원칙 배제(제66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 법정기간의 연장(제6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에 따른 연장(동조 제1항) • 외국 또는 교통불편으로 인한 연장(동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 필요 ○ 형사사건 피심자·피소자의 변호권 보장 선언(제106조 내지 제121조) ○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보상 청구권(제70조 내지 제79조) ○ 기간계산(제8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날·달·해로 계산 - 계산사유발생 다음 날 또는 다음 시간부터 계산 -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날 24시로 종료 -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중 그 기간 기산일 해당일의 도과로 종료 * 마지막 달에 그 기간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종료 - 기간 만료일이 국가적 휴식일인 때에는 그 다음 첫 노동일로 종료 - 상소장·항의서 등이 법정기간 도과 전에 발송된 경우 기간내 제출로 인정(제85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일 반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비용청구권 (제168조, 제178조, 제183조) ○ 소송서류 비공개원칙 및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개정전 소송서류 비공개원칙(제47조) -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작성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서의 작성방식(제48조) • 검증 등의 조서(제49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제50조) - 공판조서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요건(제51조) • 특례(제52조) • 서명날인(제53조) • 조서정리(제54조제1항) -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제55조) • 전회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 및 처리(제54조제2항·제3항) - 공판조서의 녹취(제56조의 2) - 공무원의 서류작성(제57조·제58조) - 비공무원의 서류작성(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기간 도과되었어도 상당한 이유 있으면 사건처리기관이 기간연장 가능(제85조) ○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의 비용 수령(제87조) ○ 소송서류(제80조 내지 제8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소송행위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작성 - 형사소송행위는 문건화하여야 효력이 발생 - 수사, 예심, 기소, 재판준비, 재판심리에서 진술서, 조서, 기소장, 판결서, 판정서 작성 - 작성날짜, 장소, 작성자의 이름 등을 밝히고, 관여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날인 - 수정·보충한 곳에서는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날인 - 형사소송문건의 비공개 원칙

구분 항목	남	한
법원의 종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법원조직법 제3조) ○ 고등법원(동조) ○ 지방법원(동조) ○ 가정법원(동조) ○ 행정법원(동조) ○ 특별법원(군사법원법 제1조) - 군사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판소(헌법 제153조, 제161조, 재판소구성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129조) ○ 도(직할시)재판소(제127조) ○ 인민재판소(제126조) ○ 특별재판소(제128조) -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
법원의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제와 단독제 병용(법원조직법 제7조, 군사법원법 제26조·제27조) - 합의제: 원칙적으로 판사 3명으로 구성(지방법원 합의부, 군사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 단독제: 판사 1명으로 구성(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 - 사안의 경중과 심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의제·단독제를 유기적으로 조화 ○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제 채택(헌법 제157조, 재판소구성법 제9조, 제17조) - 원칙: 판사 1명 및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판사가 재판장)(제202조) - 예외: 상소·항의된 사건에 대한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제274조) ○ 수명법관·수탁판사·수임판사 제도 미채택
사법권의 독 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권의 실질적 독립 - 권력분립원칙(헌법 제101조 제1항) - 법관자격 법정주의(헌법 제101조제3항) - 법관에 의한 재판(헌법 제2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권의 형식적 독립 - 재판의 독자성 등 형식적 규정(제272조) - 직무상 비독립: 최고인민회의·주석·중앙인민위원회 등에 책임(헌법 제162조, 재판소구성법 제19조)

구분 항목	남	한
사법권의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의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독립적 재판 (헌법 제103조) - 법관에 대한 파면·징계처분의 제한(헌법 제10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상 비독립: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등에 의한 재판원의 선임·소환 등(헌법 제91조·제154조, 재판소구성법 제4조 내지 제8조)
법관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건(법원조직법 제42조, 군사법원법 제23조·제24조) - 객관적 요건 필요 - 법률적 전문지식·소양 중시 ○ 소극적 요건(법원조직법 제43조) - 공무원 임용자격 없는 자 등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건(재판소구성법 제6조) - 객관적 요건 불요 - 주체사상·당성 중시 ○ 소극적 요건(재판소구성법 제6조) - 과거의 지주·부농·예속자 분가 등 제외
법관등의 선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41조 제1항)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대법관(동조 제2항) -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판사(동조 제3항) -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판소 소장(헌법 제91조) - 최고인민회의의 본회의에서 선거 ○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 (헌법 제110조, 재판소구성법 제4조) -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 ○ 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재판소구성법 제4조) -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

구분 항목	남	한
법관등의 선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판사(군사법원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 ○ 심판관(동법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관 또는 참모총장이 장교 중에서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재판소·철도재판소의 소장·판사(동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 군사재판소·철도재판소의 인민참심원(동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
법관등의 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4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 중임 불가 ○ 대법관(동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 연임 가능 ○ 판사(동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연임 가능 ○ 군판사, 심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판소 소장(헌법 제15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 임기(5년)와 동일 ○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4년)와 동일(헌법 제154조, 재판소구성법 제7조) ○ 특별재판소의 소장·판사·인민참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규정
법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서기관, 법원서기 등(법원조직법 제10조·제53조) ○ 사법보좌관(법원조직법 제54조) ○ 집행관(법원조직법 제5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서기(제205조 등)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법관등의 제척· 기피·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의 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척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이 피해자인 때(제17조 제1호)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호주·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 있었던 자인 때(동조 제2호) • 법관이 피고인·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인 때(동조 제3호)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동조 제4호)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으로 된 때(동조 제5호)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동조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소구성원의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제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 입회인 또는 그 가족이나 친척이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제16조) • 판사, 인민참심원 상호간에 친척관계가 있는 경우(제21조, 재판소구성법 제10조) • 재심 또는 제2심재판에 참여할 판사, 인민참심원이 동일사건 제1심에 참가했던 경우(제20조, 재판소구성법 제11조) • 자백강요금지 위반으로 반송된 판정의 재예심에서 예심원으로 참가할 자가 동일사건의 예심원이었던 경우(제18조) •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 입회원이 수사원, 예심원, 검사로 동일사건을 취급한 경우(제17조) •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원,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법관등의 제척· 기피·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동조 제7호) - 제척위반의 효과 • 상소이유에 해당(제361조의 5, 제383조) ○ 법관의 기피신청 - 기피신청사유(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때 •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기피신청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없음 * 기피사유 서면소명 기한: 신청 일로부터 3일 내 - 기피신청의 재판(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신청법관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며 합의부 구성 불능시 직근 상급법원에서 결정 • 피신청법관 관여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석인, 입회원이 동일사건 내에서 상호 임무를 중복하는 경우(제17조) - 배제위반의 효과 • 판결취소사유에 해당(제370조) ○ 재판소구성원의 배제신청 - 배제신청사유(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제사유가 있는 경우 - 배제신청시기(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사실심리 개시 전 • 예외: 사실심리 개시 후에 배제사유 발생 또는 동사유 지득시는 사실심리 개시 후에도 가능 - 배제신청에 대한 판정(제26조,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관계자 교체신청을 받은 검사는 3일 내 해결, 해결 시까지 수사·예심 계속 • 재판심리에 참여한 소송관계자 교체신청은 사건심리 재판소가 판정 • 판사, 인민참심원의 배제신청에 대하여는 해당 판사·인민참심원을 제외한 재판소성원으로 판정하며, 이 중 1인이라도 교체를 주장하면 교체판정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법관등의 제척· 기피·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의 회피(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이 기피신청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그 사건 심리에서 스스로 물러남 -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신청 - 회피에 대한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피신청의 재판에 관한 규정 준용 ○ 법관의 제척·기피신청·회피 규정의 법원서기관·서기, 통역인에 대한 준용(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 제7호 사유 제외 * 검사에는 준용되지 않음 (통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건취급의 포기(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 청구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입회인은 배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말아야 함 ○ 재판서기, 통역원 등의 배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을 배제신청규정에 포함(제16조 내지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경우도 함께 규정
사물관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의 명확성(범죄주의와 형벌주의 병용) ○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단독판사 관할(법원조직법 제7조제4항) ○ 예외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 관할(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일정한 예외 있음)과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의 추상성(범죄주의) ○ 인민재판소(제1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직할시)재판소,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 관할 이외의 일반범죄사건 ○ 도(직할시)재판소(제1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국가범죄 및 형법조항에 사형, 무기노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 - 도(직할시)내 인민재판소 관할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로 이송 가능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사물관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심판한 사건 ○ 시군법원의 관할(법원조직법 제34조)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등 ○ 대응규정 없음 ○ 군사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적 재판권(군사법원법 제2조) •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자 등에 대한 피고사건 -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군사법원법 제3조) • 계엄법에 의한 계엄지역 안의 일정한 형사사건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판소(제1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재판소관할의 제1심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동급 또는 동종의 다른 재판소에 이송 가능 ○ 군사재판소(제1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 인민보안원의 범죄 - 군사기관 종업원의 범죄 ○ 철도재판소(제1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운수부문 종업원의 범죄 -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범죄
심급관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3심제 원칙 ○ 심급의 철저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3급 2심제(제129조) ○ 상급재판소의 재량에 의한 변태적 심급관할제도(제127조, 제129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심급관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단독판사의 판결·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소 및 항고사건 ○ 고등법원(법원조직법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소 및 항고사건 ○ 대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고사건(법원조직법 제14조 제1호) -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제372조) -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법원조직법 제14조 제2호) - 비상상고사건(제4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 도(직할시)재판소(제1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범죄에 대한 제1심관할 - 도(직할시)내 인민재판소 재판에 대한 상소·항의사건 ○ 중앙재판소(제1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직할시)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항의사건 - 비상상소사건(제385조) - 재심사건(제404조)
토지관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관할 원칙(제4조 제1항) ○ 선박·항공기 내 범죄에 대한 특칙(제4조제2항·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범죄지 관할(제130조) ○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심리에 지장 없는 경우, 범죄자의 거주지 또는 적발지 관할재판소도 재판 가능

구분 항목	남	한
토지관할		- 사건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동급의 여러 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경우 먼저 심리를 시작한 재판소에서 재판(제131조)
관 련 사건의 관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관할이 상이한 경우 (제5조) - 1개 사건의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도 관할 가능 ○ 사물관할이 상이한 경우 (제9조) - 법원 합의부가 병합 관할 (예외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급재판소 사이일 경우 (제131조) - 먼저 심리하기 시작한 재판소에서 병합심리 가능 ○ 이급 또는 이종재판소일 경우 (제132조) - 상급재판소 또는 특별재판소에서 병합심리
관할의 창 설	○ 재정신청이 이유있는 때 고등법원은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회부(제262조 제1항제2호)	○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는 하급재판소 관할사건을 재량에 의해 직접 재판하거나 동급 재판소로 이송 후 재판 가능(제127조, 제129조)
관할의 경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사물관할간에 경합될 경우(제13조) -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 * 후에 공소를 받은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제328조제1항제3호) *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되었으면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제326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급재판소간에 경합될 경우 (제131조) - 먼저 심리하기 시작한 재판소에서 병합심리 가능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관할의 경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관할이 경합될 경우 (제12조) - 법원 합의부 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급 또는 이중재판소간에 경합될 경우(제132조) - 상급재판소 또는 특별재판소에서 병합심리
사건의 이 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직권이송(제8조) - 피고인 현재지 관할 동급법원으로 이송 ○ 대응규정 없음 ○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제16조의 2) - 동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 - 이송 전 소송행위 계속 유효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직권이송 - 관할권 있는 동급재판소로 이송 - 다만 사건심리 개시 후에는 계속심리 가능(제131조) -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 이송(제294조) ○ 상급재판소의 재량에 의한 이송 - 도(직할시)재판소는 재량으로 인민재판소 관할사건을 다른 인민재판소로 이송 가능(제127조) - 중앙재판소는 재량으로 모든 재판소의 관할사건을 동급의 다른 재판소로 이송 가능(제129조) ○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심리의무부담(제133조) - 관할권 없는 경우는 상급재판소의 승인받아 관할재판소로 이송 가능

구분 항목	남	한
관할 위반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위반의 판결 선고(제319조 본문) - 관할은 직권조사대상(제1조) - 소송행위는 계속 유효(제2조) -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항소이유에 해당(제361조의 5 제3호) ○ 토지관할위반선고의 제한(제320조제1항) - 피고인의 신청 있을 때에만 관할위반 선고 ○ 창설 관할에 대한 관할위반 선고금지(제319조 단서) ○ 사실발견 필요시 또는 긴급 시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 등 가능(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취소사유에 해당(제370조) - 소송절차의 형식에 관한 본질적인 위반이 됨 ○ 대응규정 없음 ○ 대응규정 없음 ○ 대응규정 없음
법원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권한 -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결정·명령 등 재판권한 및 그 부수권한(법원조직법 제2조 참조) ○ 수사에 관한 권한 - 공소장변경 허가제도(제298조 제1항) • 공소사실 동일성 표준 - 공소장변경 요구제도(제298조 제2항) • 법원의 재량권한(통설, 판례) - 면소·공소기각의 재판(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권한 -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판정 등 재판권한 및 그 부수권한(제13조, 재판소구성법 제18조) ○ 수사에 관한 권한 - 재판준비회의를 통한 수사통제(제289조 내지 제300조) - 수사결과가 불충분하거나 기소장의 본질적 잘못 발견시 반송판정(제293조) - 추가조사를 위한 반송판정(제293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법원의 권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법한 공소제기 등에 대한 심판 배척 -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발부(제73조, 제201조 등) ○ 판결 등의 집행에 관한 권한(제460조 참조) - 급속을 요하는 경우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구속영장 집행지휘(제81조 제1항 단서) - 필요시 재판장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지휘(제115조 제1항 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소자의 새로운 범죄사실 또는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공소변경을 위한 기록송부 등 판정(제338조) ○ 판결 등의 집행에 관한 권한 - 판결선고 재판소의 재판장이 집행지휘(제420조, 제439조) • 판결집행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시 판결선고 재판소가 판정 - 재판장은 집행지휘문을 집행기관에 송부, 사형집행에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승인 필요(제419조, 제424조)
검사의 의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사로부터 공소제기 및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능동적·적극적 국가기관 ○ 정의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상징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대변인 또는 현대 법치국가의 기초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 등의 임무 이외에 일반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헌법 제150조, 형사소송법 제12조) ○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관철하는 도구이며 이른바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감시자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일부로 기능
검사의 신 분 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과 동일한 신분보장 인정 -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한 파면·정직 또는 감봉 처분의 금지(검찰청법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검사동 일체의 원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상명·하복관계 규정(검찰청법 제7조 제1항) ○ 직무승계 및 이전의 권한(동법 제7조제2항, 제3항) ○ 직무대리권(동법 제18조제2항, 제23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수직·복종관계 규정(헌법 제151조) - 검찰사무는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 ○ 검사의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 불규정 ○ 직무대리권 불규정
검찰청의 종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검찰청법 제2조, 제3조) ○ 고등검찰청(동조) ○ 지방검찰청, 지청(동조) ○ 군검찰부(군사법원법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검찰소(헌법 제147조) ○ 도(직할시)검찰소(동조) ○ 시(구역)·군 검찰소(동조) ○ 특별검찰소(동조)
검찰청의 구 성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78조, 제89조 제16호) - 객관적 자격요건 필요(검찰청법 제27조) - 임기 2년, 중임 불가(동법 제12조 제3항) - 정년 65세(동법 제41조) ○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동법 제34조) - 객관적 자격요건 필요(동법 제28조 내지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검찰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해임(헌법 제91조제11호) - 객관적 자격요건 불요, 다만 당성이 강한 자 중에서 임명 -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헌법 제152조) - 최고인민회의 임기(5년)와 동일(헌법 제148조) ○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검찰소가 임명·해임(헌법 제149조) - 객관적 자격요건 불요

구분 항목	남	한
검찰청의 구 성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검사장, 검사장의 직급 정년(동법 제42조) - 임기제한은 없으며 정년 63세(동법 제41조) ○ 대응규정 없음 * 예심원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소 예심원 - 사건의 예심담당 • 검사의 지휘·감시하에 예심 업무수행(제156조)
검사의 수사관여 등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 검사의 제척, 기피신청, 회피 제도 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배제, 배제신청제도 규정 - 사유는 판사의 경우와 동일(제16조 내지 제28조) - 단, 사건조사 참가 또는 공소 제기 사실, 친척인 사실은 제외 ○ 배제신청 판정은 사건심리 재판소에서 수행(제24조) ○ 검사에 대한 배제사유는 예심원에게도 준용(제16조, 제28조)
검사의 권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관으로서의 권한 - 일반감시권 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관으로서의 권한 - 일반감시권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지 감시(헌법 제150조제1호) • 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지시, 국방위원회 결정·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 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지 않는지 감시(헌법 제150조제2호)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검사의 권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감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권한 (검찰청법 제4조제3호) • 재판집행의 지휘·감독권한 (동법 제4조제4호, 형소법 제460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검찰청법 제4조제5호) • 기타 법령에 의해 규정된 권한(동법 제4조 제6호) ○ 범죄수사의 주재자(검찰청법 제4조 제1호, 제2호) - 수사권(제19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 범인·범죄사실·증거 수사 - 수사지휘권(제19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의 지휘·감독 - 수사종결권(제246조, 제2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제기여부 등 수사종결 • 사법경찰관은 조사한 사건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신속히 검사에게 송부(제2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감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감시(제156조) • 민·형사 재판 감시 (헌법 제150조) • 재판집행감시(제421조) ○ 수사관으로서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참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및 재량에 의한 형사사건의 제기(제10조) • 예심원에게로의 사건위임 및 직접 예심(제156조) - 수사통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일군의 인신구속시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검사에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심원의 구속 처분시에도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검사에 의한 취소·변경가능(제144조, 제145조, 제177조, 제181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검사의 권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의 주체(검찰청법 제4조 제1호) - 공소제기의 독점자(제246조 전단) * 기소독점주의 채택 - 공소수행의 담당자(제246조 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의 지시, 다른 예심원에게로의 위임, 예심기록 검열, 예심감시 및 예심에 필요한 일체 지시(제156조, 제157조) • 해당 사유 존재시의 사건의 중지 또는 기각(제44조, 제60조) • 기소할 수 없을 정도가 예심이 불충분한 경우에 서면으로 지적하여 사건 반송(제268조) • 증거 충분시 기소장을 작성, 사건기록과 함께 재판소에 송부(제261조) • 상급검찰소의 승인 후 피심자를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결정(제63조) • 사건기각시 증거물 귀속에 관한 결정(제58조, 제59조) ○ 공소관으로서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제기권(제12조, 제261조) * 기소독점주의 채택(제12조) - 공소수행권(제276조, 제278조, 제288조)
피의자· 피고인의 의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제20조 등 참조) -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범죄수사의 대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의자(제143조 등 참조) - 예심이 제기되기 전 범죄수사의 대상인 자 ○ 피심자(제148조 등 참조) - 공소제기 전 예심의 대상자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피의자· 피고인의 의 의	○ 피고인(제286조 등 참조) -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 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고 있는 자	○ 피소자(제281조 등 참조) -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 소가 제기되어 있는 자로 취급되고 있는 자
피의자· 피고인의 권 리	○ 피고인의 법관 기피신청권 (제18조) ○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증감·변경청구(제244조) ○ 공판조서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제기 및 변경청구(제54조) ○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방어권 (제161조의2, 제293조, 제294조, 제296조) ○ 피고인의 최후진술권, 변론 (제303조) ○ 변호인선임권·의뢰권·접 견교통권·국선변호·필요적 변호(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89조, 제90조, 제282조, 제 283조) ○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권 (제276조 등) ○ 보석청구권(제94조) ○ 증거조사 참여권(제145조 등) ○ 강제처분절차 등의 참여권 (제121조 등)	○ 공소관계자의 판사, 인민참 심원, 검사, 재판서기, 수사원, 예심원, 감정인, 통역원, 해석 인에 대한 배제신청(제16조) ○ 피심자의 피심자신문조서 열람 및 정정신청(제175조) ○ 재판조서상의 누락·정정 부 분에 대한 피소자의 이의제 기권(제357조) ○ 피소자의 증인신문권(제312조) ○ 피소자의 심리 후 보충사항 에 대한 신청권, 변론 및 최 후진술권(제330조) ○ 변호인 선임권(제108조), 공 선변호권(제111조), 변호인 포기권(제109조) ○ 피소자의 공판정 출석 및 출석 의무(제281조) ○ 대응규정 없음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9조) ○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제275조의2) 	
변호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인의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선임권 보장(제30조, 헌법 제12조제4항) - 선임방법: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제32조제1항) ○ 변호인의 자격(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만 가능성이 원칙 - 대법원 재판 이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자도 가능 ○ 변호사의 사명(변호사법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 ○ 변호인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견교통권, 서류·물건접수권, 수신청구권(제34조) -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제35조) - 독립소송행위권(제36조) ○ 필요적 변호, 국선변호인 선정(제33조, 제282조, 제28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인의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가능시기: 형사책임추궁 결정 이후(제110조) - 선임방법: 해당 변호사회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체결(변호사법 제4조, 제30조) ○ 변호인의 자격(제1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 피심자·피소자의 근친자, 소속단체 대표 - 그밖의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은 자 ○ 변호인의 임무(제10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건의 정확한 취급처리 및 피심자·피소자의 권리 보장 ○ 변호인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인의 접견권(제117조) - 변호인의 증거수집·확인(제119조) - 변호인의 사건기록 열람권(제118조) - 변호인은 피심자·피소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검사 또는 재판소에 의견제기(제121조) ○ 재판소에 의한 변호인 선정(제111조)

구분 항목	남	한
변호인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때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인이 선정됨이 없이 사건이 재판소에 기소된 경우, 재판소가 해당 변호사회에 의뢰
기 타 소 송 관계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소송당사자 아님 * 고소제기권 있음(제223조) ○ 배상명령신청인(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1항) - 소송당사자는 아님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죄 및 과실사상의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에 관한 형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한 물질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손해보상청구자 및 그 대리인(제70조 내지 제79조) -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 제기 가능 - 범죄피해자는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하면서 공판절차 참가 - 손해보상청구자 등은 피소자와 거의 대등한 소송법상 권한 행사
수사의 의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회부하는 것(제134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수사의 시 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수사주재권한(제19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 되는 때에 범인·범죄사실과 증거 수사 ○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 또는 수사보조(제196조제1항) ○ 수사의 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제195조 내지 제197조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범인의 체포(제212조) • 변사자 검시(제222조) •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수사기관의 인지(타 사건수사 중의 범죄발견, 진정, 범죄 신고, 기사, 풍설, 세평) • 피해자 등의 고소, 고발(제223조, 제234조) • 범인의 자수(제2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시작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시작결정시부터 형사사건취급 개시(제1350조) -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제136조) - 검사의 관여(제1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시작결정후 24시간 내에 검사에게 결정서 등본 송부 • 검사는 결정으로 수사시작결정 취소 가능 ○ 수사를 요하는 범죄자료 지득 즉시 수사시작결정(제135조) ○ 수사시작결정의 처리(제1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시작결정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성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 -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수사시작결정 취소 가능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범죄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 및 고발 구분 ○ 범죄의 고소·고발의무 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고발 가능(제234조 제1항) - 다만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고발의무 인정(제234조제2항) ○ 고소·고발의 방식(제2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또는 구술 - 구술고소·고발 접수시의 조서작성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신고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 및 고발 포함 ○ 범죄신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신고의무 부담(제30조) - 범죄행위 준비 또는 수행사 실인지시 인민보안·안전보위기관·검찰 등에 즉시 신고(제31조) - 신고의 방식(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또는 구두 • 서면신고시 주소·이름 명시 • 거짓신고시의 형사책임부담 고지 • 구두신고접수시 신고조서 작성: 신고자 신분, 신고내용, 거짓신고의 책임고지 등 기재 ○ 신고수리 및 처리결과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보안·검찰·안전보위기관의 범죄신고 수리의무(제34조) - 신고처리결과 고지의무(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안으로 신고정형을 신고자에게 고지 • 신고처리결과에 대해 의견 있는 신고자는 상급기관에 재신고 가능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수 사 기관의 권한 및 임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경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업무 수행(제196조제1항) ○ 사법경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받아 수사보조업무 수행(동조 제2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일반적 제한 없음(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 수사종결시 검찰에 사건송치(동규칙 제5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원은 범죄자 적발에 필요한 자료 및 진술요구 가능(제1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진술시의 형사책임 고지 ○ 수사원은 검증, 검진, 수색, 압수, 감정 의뢰 가능(제138조) ○ 수사원은 범죄자 적발 후 증거수집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증거수집 지연 불가시는 수집 가능(제141조) ○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후 타 수사기관에 사건이관시 검사에게 고지(제1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이관결정으로 이관 ○ 수사원은 관할 밖의 수사행위 필요시 해당 관할 수사원에게 의뢰 가능(제140조) ○ 수사원은 범죄자 적발·확인 후 즉시 예심회부결정으로 예심에 회부(제146조) ○ 검사의 지시에 대한 의견제시(제1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 가능 - 의견을 받은 상급검찰청은 3일안으로 해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수사의 감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지휘·감독권(제196조)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교체 임용요구·수사중지명령권 (검찰청법 제5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수사감시(제1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행위 참가, 사건기록 검토, 위법수사행위 교정, 수사원에게 서면지시
수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39조)에 고소사건처리기간(원칙적으로 2개월)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의 수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1개월(제35조) - 범죄혐의자를 체포한 경우 10일 이내에 예심회부 또는 석방여부 결정(제144조)
예심관련 일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 예심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의 임무(제1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자 및 범죄사건의 전모를 확정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 ○ 예심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범죄사건 (제124조, 제157조) ○ 예심원의 의무(제1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의 성격, 범죄의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행위의 정도와 결과, 범죄수행상 피심자의 역할과 책임정도 등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모든 사정 해명 ○ 예심원의 권한(제158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자 심문·체포와 구속·검증·감정·증인심문·수색·압수 등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예심관련 일반규정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기간(제15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시작 후 2개월(노동단련형은 10일) - 반송받은 사건은 20일(노동단련형은 7일) - 특별히 복잡한 사건은 4개월연장(노동단련형은 1개월연장) ○ 예심의 관할(제124조, 제1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검사 승인 하에 관할예심원에 고지 후 범죄자의 거주지 또는 사건적발지의 관할예심원이 예심가능 - 반국가범죄사건 : 안전보위기관 예심원 - 일반범죄사건: 적발한 인민보안기관 또는 검찰기관 예심원 - 군사상 범죄사건 및 군대내 일반범죄사건: 군사검찰기관 예심원 - 철도운수부문 종업원의 범죄사건 및 철도운수사업 침해 범죄사건: 적발한 철도안전부, 철도검찰소 예심원 ○ 예심사건의 이송(제1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밖 사건은 긴급한 예심행위 후 검사 승인 하에 사건이송결정으로 관할예심원에 이송

구분 항목	남	한
예심관련 일반규정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의뢰(제15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밖 예심행위 필요시 관할지역 예심원에 의뢰 가능 - 의뢰받은 예심원은 결과 회보의무 부담 ○ 반복조사의 금지(제15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를 그대로 이용 가능 - 노동단련형 범죄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예심 종결 ○ 검사의 예심감시(제1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참가, 예심기록 검토, 위법예심행위 교정, 예심원에게 서면지시 등 - 검사의 지시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 - 상급검찰소는 3일 이내에 해결
예 심 의 시 작 과 형사책임 추궁결정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의 시작(제15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일군으로부터 사건송치 후 48시간 내 예심시작결정 - 사건과 무관한 범죄·범죄자 적발시 검사에 고지 후 예심 시작결정 또는 수사일군에 자료 이송 ○ 형사책임추궁결정(제158조 내지 제1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시기: 증거조사를 통해 피심자 확정에 충분한 자료 수집시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예심 의 시 작 과 형사책임 추궁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책임추궁결정서 기재사항: 예심원 이름, 결정날짜, 피심자 이름, 적용법조, 소추 이유 - 결정사실 고지의무: 결정 후 48시간 내 피심자에 고지·변호인선임권 고지 - 결정서등본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 송부 - 결정 후 적용법조 변경·보충 필요시 그에 대해 결정
예심종결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 종결사유(제25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질 경우 -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예심종결 절차(제25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종결을 피심자에게 알리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질문 -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고,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 - 피심자의 신청에 따라 예심을 더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어야 함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예심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예심종결 참가(제2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의 종결수속은 검사의 참가하에 진행 ○ 예심종결조서의 작성(제25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날짜와 시간, 기록을 보게한 정형, 제기된 의견에 대한 처리정형 등을 기재 ○ 검사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제2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 그날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증거물첨부결정서와 함께 송부 ○ 예심원의 사건기각결정(제5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소법 제53조에 규정된 소추요건 결여시 - 검사의 승인을 받아 기각결정 ○ 권리침해시 검사에게 의견제기(제259조 내지 제26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 입회인, 피해자, 피심자, 피심자의 보증인이 피침해사실 인지 후 7일 내 제기 - 48시간 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에게 통지 - 의견을 제기받은 검사는 3일 이내에 처리, 결과 통보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체포 및 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범·준현행범의 체포권자(제212조) -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가능 - 다만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함(제214조) ○ 현행범·준현행범의 체포요건(제211조) -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 장물 또는 범죄사용의 의심이 있는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 신체·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 피체포자의 처리 - 검사·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의 체포시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신병인도(제213조제1항) - 인도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시 경찰관서 동행 요구(동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자·범죄혐의자의 체포권자(제180조) - 수사원, 예심원이 담당 - 체포영장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음 ○ 범죄자·범죄혐의자의 체포요건(검사승인 불요: 제143조) - 범행착수 또는 감행중·감행직후 발견시 -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혐의자로 지목한 때 - 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흔적 발견시 - 도주감행 또는 추적당한 때 - 주거불명시 ○ 피체포자의 처리(제144조) - 구금시 체포 후 48시간 내 검사의 승인 필요 - 승인 못받거나 체포 후 10일내 범죄자 확인 불가시 즉시 석방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구속관련 일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제73조, 제75조, 제201조, 제209조) ○ 구속영장의 집행(제81조, 제20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 구속이유의 고지(제72조, 제209조) ○ 구속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의 구속: 구인과 구금(제69조) - 피의자의 구속(제201조) ○ 대응규정 없음 ○ 구속의 취소(제93조, 제20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취소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처분의 일반요건(제17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자의 예심 또는 재판회피 및 사건조사 방해금지를 위한 경우 ○ 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제18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법조 및 처분이유 명시 ○ 체포영장 발급(제18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원은 검사에게 체포영장발급을 신청, 검사의 승인은 체포영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함 ○ 구속처분결정의 피심자에 대한 고지의무(제182조) ○ 구속처분의 종류(제18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류구속: 피심자를 구류하는 구속처분 - 자택구속: 피심자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 - 지역구속: 피심자를 정해진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처분 ○ 체포, 구속처분의 시기(제17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책임추궁결정 이후 -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 이전에 가능하나 10일 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못할 경우에는 석방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구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있는 피고인·피의자(제70조, 제201조) ○ 구속의 사유(제70조, 제20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의 상당한 이유 -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도망 또는 도망우려 *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함(제70조 제2항, 제201조제1항 단서) ○ 구속영장집행시 동 영장의 제시(제85조, 제209조) ○ 구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구속기간: 2개월(제92조 제1항 본문) -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 가능, 갱신기간은 2개월(동조 제1항 단서, 제2항) - 검사·사법경찰관리의 구속기간: 10일(제202조, 제20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 구류구속 대상(제17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노동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사형선고 가능한 범죄사건 피심자 - 노동단련형의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 - 임신한 피심자의 경우 산전 3개월 이후 산후 7개월까지는 불가 ○ 체포, 구류구속사유(제17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사건의 조사방해, 예심 또는 재판회피 우려 ○ 체포시 절차(제18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자 체포시에 신분확인 증명서와 검사의 승인을 받은 체포영장을 제시 -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관에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송부 ○ 구류기간(제187조 내지 제18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을 위한 구류기간은 2개월(노동단련형은 10일) - 중앙검찰소의 승인으로 1개월 연장 가능 - 특별히 복잡한 사건은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으로 1개월 재연장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구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허가 얻어 검사 구속기간의 10일 이내 1차 연장 가능 (제205조)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경우 구속기간 연장의 특칙 있음 (동법 제19조) ○ 점건교통권의 보장(제89조, 제91조, 제209조) ○ 구속적부심사제도(제214조의 2) ○ 보석제도(제94조 내지 제100조, 제102조 내지 제105조) ○ 구속집행정지제도(제101조 내지 제105조, 제209조) ○ 재구속의 제한(제20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단련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건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1개월 연장 가능 ○ 피심자의 변호인 점건교통권 보장(제106조 등) ○ 대응규정 없음 ○ 대응규정 없음 ○ 대응규정 없음 ○ 대응규정 없음
기타의 구 속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 구속집행정지제도 참조 ○ 대응규정 없음 * 구속집행정지제도, 보석제도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자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제189조) - 2명 이상의 보증인 필수 · 보증인은 보증서 제출 ○ 지역구속처분(제190조) - 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서약서 제출
검증 및 검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의 주체 - 검사 · 사법경찰관 •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 필요 (제215조) • 예외적으로 영장없이 검증 가능(제216조, 제217조) - 법원(제139조) • 사실발견에 필요시 검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 · 검진의 주체(제192조) - 원칙적으로 수사원 및 예심원 - 검사와 재판소도 필요에 따라 검증과 검진 가능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검증 및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의 내용(제1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검사, 시체의 해부 -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 ○ 검증조서(제49조제1항,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의 내용기재 - 필요시 도화, 사진 첨부 ○ 검증의 입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 신체검사시 의사 또는 성년여자 참여 필수(제141조 제3항) ○ 대응규정 없음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의 종류(제19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현장검증 - 증거물검증 - 죽은사람에 대한 검증 - 산 사람에 대한 검진 ○ 검증조서, 검진조서(제20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당시 상태와 특징, 검증의 결과 기재 - 필요시 약도와 사진 첨부 - 법의학감정의사의 검진시 검진 조서 작성 ○ 검증·검진의 입회인(제19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의 입회인 필요 - 여성 검진시는 여성 입회 - 필요시 검증에 감정인 참가 가능·법의감정의사의 검진 가능(제200조) ○ 현장검증의 원칙(제19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현장에서 발견 또는 압수 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 - 다만 장시간이 걸리거나 특 별사정 존재시 다른 곳에서 검증 가능 ○ 심리실험(제201조 내지 20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거나 듣거나 일정한 행위 의 가능성 여부, 그러한 원 인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 였는지 여부 - 입회인 2명 참가 - 심리실험 조서작성

구분 항목	남	한
검증 및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검사 등에서의 주의사항 (제141조) ○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검증 가능(제136조, 제1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의 제한(제19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 검진은 낮에만 가능 -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가능 ○ 검진결정서의 작성(제19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대상자와 검진이유를 기재
압수 및 수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 필요 (제215조) - 예외적인 경우 영장없이 압수·수색 가능(제216조 내지 제218조) ○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의 제1회 공판기일전 압수·수색의 청구(제184조) ○ 법원의 압수·수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증거물 또는 몰수대상물의 압수 또는 압수할 물건의 제출명령(제106조) - 필요시 피고인의 신체·물건·주거 기타 장소 수색 가능,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제109조) - 공판정 외에서는 영장발부 (제113조) - 임의제출물·유출물은 영장없이 압수 가능(제10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수·수색(제2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자 발견, 범죄사실 규명에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의 발견 고착 ○ 압수·수색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색의 경우 범죄자 은거, 범죄사실 인정에 필요한 물건·문서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근거 필요(제216조) - 압수·수색시 검사의 승인 필요(제217조). 다만, 법에 따른 범죄자, 범죄혐의자 체포시는 검사승인 불요(제143조)

구분 항목	남	한
압수 및 수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수·수색의 야간집행 제한 및 예외(제125조, 제126조) ○ 압수·수색시 임회인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당사자 또는 책임자 참여(제121조 내지 제123조) - 여자 신체수색시 성년여자 참여(제124조) ○ 대응규정 없음 ○ 압수의 대상(제106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물 - 몰수한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 ○ 수색의 대상(제10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물건·주거 기타 장소 ○ 압수·수색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검사·사법경찰관의 조서작성의무(제49조제1항) - 압수조서에 품종, 외형상의 특징, 수량기재(동조 제3항) - 압수목록 작성·교부(제1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압수·수색 원칙(제2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한 경우에만 야간에 가능 ○ 압수·수색시 임회인 참가(제2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 압수시는 그 대표자 임회 - 체신기관이 관리하는 편지, 전보 등 압수시는 그 기관의 대표자 임회 - 여성의 신체수색시는 여성 임회 ○ 외교대표부 관리건물 등의 압수·수색에 대한 특칙(제222조) ○ 압수의 대상(제2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사건과 직접 관련있는 문서 또는 물건 ○ 수색의 대상(제216조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의 신체 또는 주거 ○ 압수·수색조서(제2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서작성의무 - 압수·수색 결과와 제기된 의견 기재 - 압수품 목록 작성, 등본 교부(제223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압수 및 수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제118조) ○ 출입금지 등의 조치(제119조) ○ 필요시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처분 가능(제120조) ○ 압수·수색의 제한(제110조 내지 제1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상·공무상·업무상·비밀과 압수·수색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수·수색 결정서의 제시 (제218조) ○ 필요한 경우 수색시 경비 배치(제219조)
재산담보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담보처분 대상(제2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몰수형이 규정된 사건 취급시 몰수대상 재산 - 범죄행위로 입은 국가·공민들의 재산상 손해보상을 위한 보상책임자의 재산 ○ 예심원의 손해보상청구 고지 의무(제7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에 대해 손해보상청구 가능 고지 ○ 재산담보처분절차(제248조 내지 제25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를 밝힌 결정으로 처리 - 피담보처분자에 대하여 담보처분결정서 제시 - 재산담보처분조서와 재산목록 2통 작성 - 재산보관자에 대한 담보처분 재산 보관책임 고지

구분 항목	남	한
재산담보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담보처분이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것 확인시 동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 담보처분재산 부존재시 조서 작성(제252조) ○ 부패 또는 사용불가 담보처분재산의 해당 기관 이관(제253조)
피의자 신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 피의자 출석요구(제200조제1항 전단) ○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관의 구속영장 필요(제201조) ○ 대응규정 없음 ○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제109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 가능 ○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제30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자심문시기: 형사책임추궁 결정 고지 후 48시간 내(제162조) ○ 소환 및 구인(제16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구류 피심자심문시 소환장 송부 -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시 구인 - 구인은 구인결정서에 따라 예심원이 집행 ○ 호송(제16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류된 피심자 심문시 계호 일군이 예심장소까지 호송 ○ 피심자 체포의뢰(제16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자 도주 또는 주소불명시 - 피심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체포영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송부 ○ 강압에 의한 자백강요금지(제16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심문은 8시~20시만 가능 -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참가밑에 그 밖의 시간에도 가능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피의자 신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의 증거로 인정 불가(제310조) ○ 피의자의 정신상태 감정 및 감정유치(제221조의 3) ○ 피의자진술의 청취(제200조 제1항 후단) ○ 참고인 등과의 대질(제245조) ○ 필요시 통역인, 번역인 참가(제180조 내지 제183조 참조)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증감·변경 청구(제244조) ○ 피의자 이외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 조사(제221조 전단) - 압수·수색·검증(제215조 내지 제220조) -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등(제221조 후단, 제221조의 3, 4) - 사실조회(제199조제2항) ○ 피의자 신원의 확인(제241조) ○ 진술거부권 고지(제200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의 증거로 인정 불가(제9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자의 권리통고(제169조) - 피심자심문시 2명의 입회인(제172조) ○ 정신이상을 이유로 한 기각 및 의료처분(제43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 상태에서 범죄 또는 범죄 후 정신이상 확증, 정신상태 회복불가 증명시 - 법의학정의사의 감정또는 인민병원 의사의 협의감정 필요 ○ 피심자심문의 개별화(제1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대질심문 가능 ○ 피심자에게 우선 진술기회 부여(제171조) ○ 필요시 통역원, 해석인 참가(제173조) ○ 피심자신문조서 작성(제174조) ○ 피심자에 의한 심문조서 내용확인 및 조서정정 신청(제175조) ○ 대응규정 없음 ○ 대응규정 없음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증인 (참고인)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증언의 제한·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제한 (제147조) - 근친자의 증언거부권(제148조) -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 (제149조) ○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의 구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에 의한 증인구인 가능 (제152조) ○ 대응규정 없음 ○ 필요시 통역인, 번역인 참여 (제180조 내지 제183조) ○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 권한 (제2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상 필요시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가능 ○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 불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의 자격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보고 느낀 것이 있는 모든 자 (제225조) - 형사소송임무를 겸임할 수 없거나(제17조),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인하여 사실을 옳게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자(제22조) ○ 증인의 구인(제1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원의 소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시 구인 -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집행 - 구인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증인의 진술의무(제2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답변할 의무 부담 ○ 조선말 미해득자 및 언어장애자의 증인신문(제230조) ○ 예심원의 증인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장소는 원칙적으로 증인이 있는 곳, 필요시 소환 가능(제226조) -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증인 보호, 진술조서의 직접 작성·수정·첨가 가능(제229조)

구분 항목	남	한
증인 (참고인)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공판기일전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의 청구(제184조) -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 2) -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진술을 거부한 경우 -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문원칙, 증인상호간의 연락금지, 필요시 대질 가능(제231조) - 14세 미만자 심문시 교원, 부모, 후견인 기타 보호자 임회(제232조) - 증인 본인여부 및 소송당사자와의 관계 등 사전 확인, 심문이유 및 증인의 의무 설명, 허위진술시 형사책임 통고(제223조) - 증인의 지득사실을 먼저 진술케 하고, 증인신문조서 작성(제234조)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식·경험있는 자에 대한 법원의 감정명령 및 수사기관의 감정위촉(제169조, 제221조) ○ 감정인 선서 및 허위감정의 처벌경고(제170조) ○ 감정인의 구인불가(제177조) ○ 감정인의 여비·일당·숙박료·감정료·체당금 청구 가능(제178조) ○ 감정증인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 적용(제179조) ○ 수사기관의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뢰자(제206조) - 예심원이 원칙(필요시 검사와 재판소도 가능) ○ 감정의 종류(제207조) - 법의학감정, 법정신병학감정, 법화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탄도학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인물감정 ○ 감정의 대상(제206조) - 비정상적인 주검, 신체의 상해정도, 정신병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

구분 항목	남	한
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사법경찰관의 감정위촉(제221조) - 수사과정에서의 허위감정 불 처벌 - 제1회 공판기일전 감정의 청구(제184조) - 필요시 감정유치 청구(제221조의 3) ○ 법원의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감정명령(제169조) - 감정인의 선서 및 허위감정 처벌경고(제170조) - 감정경과·결과의 서면보고(제171조제1항) - 수인의 감정인의 각각 또는 공동보고(동조 제2항) - 감정보고서 판단이유 명시, 필요시 감정인의 설명청취(동조 제3항, 제4항) - 법원 외의 감정(제172조) - 감정인의 필요한 처분권(제173조) - 감정인의 참여권·신문권(제174조) - 당사자의 감정참여권(제176조) - 수명법관에 의한 감정(제17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기관(제20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에 의뢰 - 해당 전문감정기관 부재시 국가적 자격자 또는 전문지식인에게 의뢰 가능 ○ 감정관련 결정 및 판정(제20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뢰시 감정대상과 감정인의 의무에 대한 결정·판정을 한후 결정서, 판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 송부 ○ 감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제20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뢰시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제출 ○ 감정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기관, 감정인은 감정의무 부담(제210조) - 감정인의 감정서 작성의무(제211조) - 다수의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상이할 때는 개별적으로 작성(제211조) ○ 감정인의 권리(제2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뢰기관에 자료 요구 및 전문지식 필요시 전문일군 요구 ○ 재감정, 감정인 변경(제2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자료의 부정확, 감정사실의 불명, 감정결과 의문시 결정·판정으로 변경

구분 항목	남	북
감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인 고지의무(제2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뢰기관은 피심자, 피소자에게 선임한 감정인을 고지 ○ 감정인 심문(제2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뢰기관은 감정내용 불명확시 감정인 심문 가능 - 다수 감정인의 감정결과 상이시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개별심문 또는 대질심문 가능
검사의 사 건 처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 또는 인치받은 후 10일 내 기소 또는 석방(제203조) ○ 대응규정 없음 ○ 검사의 공소제기(제246조)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는 10일 내 사건기록 검토처리(제2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단련형의 경우에는 3일 내 검토처리 ○ 사건기록에서의 검토사항(제26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과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모든 사정의 정확한 해명 및 증거 존재 여부 - 예심과정에서의 준법 여부 - 형법조항의 올바른 적용 여부 ○ 검사의 기소장 작성(제26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확증 사실과 증거, 형법 규정, 피심자 성명,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 정보를 기재 ○ 사건의 예심반송(제2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는 기소할 수 없을 정도로 예심이 불충분할 경우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반송

구분 항목	남	한
검사의 사 건 처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불기소처분(제247조 제1항)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형사소송중지 및 사건 기각(제44조, 제53조) ○ 검사의 사회적 교양회부 결정(제62조)
검사의 공 소 제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독점주의 인정(제2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재판상 준기소절차(제262조), 즉결심판 청구(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등 ○ 공소제기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장 제출(제254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장 일본주의 - 공소장의 기재사항(제254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의 성명 등 특정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 공소제기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 이후에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수사 가능(통설) - 소송계속(제266조 등) - 공소시효 정지(제25조) ○ 공소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시효기간(제249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 해당 범죄: 15년 • 무기징역·무기금고 해당 범죄: 10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범죄: 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독점주의 채택(제12조) ○ 공소제기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재판소에 송부(제265조) - 기소장의 기재사항(제26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그 증거, 양형에 관련된 사정 • 그 범죄를 규정한 형법조항 • 피심자 인적사항과 구류날짜 •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 관련 내용 ○ 공소제기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준비절차의 개시(제289조) - 재판소만이 모든 신청 및 항고에 대해 해결(제300조) ○ 공소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소송법상 대응규정 없음 * 형법(2004년) 제56조 및 제58조에 형사소추시효기간 규정 - 형사책임추궁 시효기간(형법 제56조)

구분 항목	남	한
검사의 공 소 제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 5년 •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다액 1만원 이상 벌금 해당 범죄: 3년 •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년 •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해당 범죄: 1년 - 공소제기후 판결확정 전에 15년이 경과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의제(동조 제2항) ○ 시효의 정지(제2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제기로써 정지,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확정시부터 진행 - 공범 중 1인에 대한 기소와 공소시효의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 노동단련형 해당 범죄: 5년 • 5년 이하 노동교화형 해당 범죄: 8년 • 5년 초과 10년 이하 노동교화형 해당 범죄: 12년 • 10년 이상 노동교화형 해당 범죄: 15년 • 무기로노동교화형 해당 범죄: 20년 • 반국가 범죄 및 고의적 중 살인죄: 공소시효제도 미적용, 기간에 관계없이 처벌 ○ 대응규정 없음 ○ 시효중단(형법 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죄를 범한 경우 -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한 경우 - 수사시작결정이 있는 경우
재 판 준 비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사건은 재판준비 후 재판 회부(제289조 이하) - 재판을 맡은 판사가 혼자서 처리(제289조) - 판사가 제44조 등 판정시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제296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재 판 준 비	<p>○ 재판소의 재판준비</p> <p>- 공소장 부분의 송달 및 5일간 의 유예기간(제266조, 제269조)</p>	<p>○ 재판준비절차에서의 검토사항 (제290조)</p> <p>- 예심에서의 충분한 사건조사 유무</p> <p>- 기소사실의 근거 유무</p> <p>- 적당한 형법적용 유무</p> <p>- 근거없이 범죄의 공모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였는지 여부</p> <p>- 예심에서의 형소법상 원칙 준수 여부</p> <p>- 피심자의 신청에 대한 해결</p> <p>-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문제 해결</p> <p>○ 재판준비절차의 종결</p> <p>- 사건처리 유형(제292조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재판회부 • 사건을 검사에게 반송 • 판정으로 잘못 시정 • 사건기각 <p>- 재판회부 판정시 결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일시 · 장소, 재판심리에 참가시킬 증인 · 감정인 및 재판심리의 공개여부 결정 <p>○ 재판준비 판정에 대한 검사의 항의(제297조)</p> <p>- 피소자 항소 불가, 검사만이 상급재판소에 항의 가능</p> <p>○ 재판소의 재판준비</p> <p>- 재판소가 피소자에게 기소장 등본 송부(제298조)</p>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재판준비	- 검사, 변호인, 보조인에게 공판기일 통지(제267조제3항)	- 재판심리 시작 3일 전에 검사, 피소자, 변호인에게 재판심 리날짜 고지(제299조) - 기소사건에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의 배타적 해결 (제300조)
재판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 공판정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의 출석(제275조제2항) - 서기관 또는 서기의 열석 (제275조제2항) -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 (제275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심재판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따라 재판소가 재판관 계자들의 참가 밑에 형사사 건을 심리하고 객관적인 증 거자료에 근거하여 범죄자 와 범죄사실을 정확히 확정 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옳 게 분석평가함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제270조) -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며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시 현지 재판을 조직진행(제286조) ○ 재판정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심리의 주체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제274조) -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 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담당 (제274조) - 재판서기(제274조) - 하나의 사건은 동일한 재판소 성원으로 재판(제275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재판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불출석시는 검사 출석없이 개정 가능 (제278조) - 피고인의 출석권과 재정의무 (제276조, 제281조) • 피고인의 불출석과 궐석심리 (제277조 등) ○ 대응규정 없음 * 배상명령제도 참조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제27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진행의 질서유지 - 심리의 원활한 수행 ○ 재판장의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58조, 제60조,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정의 금지 및 퇴정 명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와 변호인이 참가하나, 변호인 방조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검사나 변호인 불참 가능(제276조) - 피소자의 참가거부 또는 회피시는 구인(제281조) ○ 손해보상청구심리(제7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가 필수 - 심리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 제기 가능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제27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지휘 -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질서를 준수토록 통제 ○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제3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정에서의 퇴정 경고 및 퇴정 판정 ○ 재판심리에서의 검사의 역할 (제288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소자의 죄행폭로 및 과학적 증명 -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시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재판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 공판기일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신문(제284조) • 검사의 모두진술(제285조)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형사소송규칙 제127조) • 피고인의 모두진술(제286조) - 사실심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 신문(제287조) • 증거조사(제290조 내지 제297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심리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제10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 피심자 및 피소자의 권리보호 ○ 재판기일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장이 피소자 인정심문, 피소자의 권리고지(제302조) • 재판장의 재판소성원과 검사·재판서기·감정인·통역원·해석인 고지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질의(제303조) • 불참 증인·감정인의 불참이유 고지, 새 증거신청 여부 질의 후 판정(제304조) - 사실심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서기의 기소장 낭독·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 인정 여부 질문(제305조, 제306조) • 재판소는 검사·변호인에게 질의 후 심리순서 결정(제307조) • 피소자심문(제308조 내지 제310조) • 증인심문(제311조 내지 제315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재판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조사의 시기(제290조) • 증거조사의 장소(제291조) • 증거조사의 방식(제292조) •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개진 및 필요한 증거조사신청 가능 고지(제293조) •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권(제294조) •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제295조)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제296조) • 검사의 의견진술(제302조) • 피고인·변호인의 최후진술(제303조) - 판결의 선고(제422조) ○ 공판절차의 정지(제30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씩 재판정에 소환·재판장이 본인 여부 및 소송당사자와의 관계 확인, 허위진술시의 형사책임 통고(제311조) * 증인심문순서, 보충질문권(제312조) * 증인의 퇴정제한(제314조) • 증인심문 이외의 증거조사(제316조 내지 제322조) • 사실심리 종결고지(제324조) • 검사의 논고와 변호인의 변론(제325조 내지 제329조) • 피소자의 최후진술(제330조) • 재판장은 재판심리 종결고지 후 인민참심원들과 판결 협의(제331조) - 판결의 선고(제347조) ○ 재판조서의 내용·작성기한·열람기간 수정 등(제355조)
법원에 의한 기소의 추가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장 변경(제298조)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조의 추가적용, 형벌의 가중, 형벌가중조항으로 변경할 사실 발견시 판정으로 기록을 검사에게 반송(제335조) - 범죄는 밝혀졌으나 형법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심리후 판결 가능(제335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법원에 의 한 기소의 추가와 변 경	○ 대응규정 없음	○ 형벌감경조항 적용사유 발견 또는 법조적용 잘못 발견시 기소변경(제338조) ○ 피소자 아닌 다른 사람의 범죄 발견시 형사책임추궁 판정후 기록을 검사에게 반 송하거나 다른 제재를 주는 판정 가능(제339조)
증 거 제 도	○ 대응규정 없음 * 형법상 물수에 관한 규정 (형법 제48조) 참조 ○ 증거재판주의(제307조) ○ 대응규정 없음 ○ 대응규정 없음	○ 증거의 의의 - 증거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 중에서 얻어낸 것(제89조) - 증거물은 범죄행위에 사용 하였거나 범죄의 흔적이 있는 물건, 범죄행위의 대상으로 된 물건, 범죄와 범죄자의 적발과 범죄사실의 규명에 도움이 될 문건(제90조) - 증거문서는 그 내용이 증거 로서 의의를 갖는 문서 (제91조) ○ 증거재판주의(제88조) ○ 증거수집방법 - 균중의 힘에 의거 과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증거수집 (제94조) ○ 증거의 이용 -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법에 따라 제한없이 증거수 집·이용 가능(제93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증거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증거보전 필요시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청구 가능 • 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함 • 청구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권한 동일 - 서류의 열람 등(제185조)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 얻어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 가능 ○ 대응규정 없음 * 물수의 선고와 압수물(제332조),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등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의 수집, 보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가 진술을 요구하거나 사건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물건, 문서의 제출과 압수, 수색 등에 응해야 할 의무(제94조) - 수집한 증거는 진술서, 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하고, 필요시 사진, 도면화, 녹음, 녹화(제95조) - 증거물은 수집에 관한 조서와 증거물첨부결정서 첨부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사건조사심리기관이 보관(제101조) - 사건조사심리기관이 보관 불가능한 증거물은 봉인하여 관계자에 보관 후 보관증을 사건기록에 첨부(제101조) ○ 증거물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이종시 사건기록과 함께 증거물 이송(제102조) - 부패 또는 사용불능의 우려 있는 증거물은 수사일군, 예심원의 결정으로 임자에게 반환 또는 해당 기관에 이전 가능(제103조) * 검사승인 필요, 사건기록에 근거문건 첨부(동조) - 판결, 판정, 사건기각결정시 증거물처리 명시 의무(제105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증거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능력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의 배제 (제309조, 제317조) - 자백의 보강증거 필요 (제310조)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통설, 판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압적 방법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제98조) -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제98조) - 증거의 객관적 검토와 종합적 평가 강조(제88조, 제97조)
판결의 선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규정 없음 ○ 판결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위반의 판결(제319조) - 형선고 판결(제321조) - 형의 면제 · 선고유예 · 집행유예 판결(제321조, 제322조) - 무죄판결(제325조) - 면소판결(제326조) -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 재판서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서의 법관작성원칙 (제38조) - 재판의 이유명시 필요(제39조) •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 명령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고, 법률적인 분석평가에 기초한 판결(제270조, 제340조) - 재판의 독자성 보장(제272조) ○ 판결시 심리 판사와 인민참심원만 참가(제341조) - 판결 채택시의 토의결정사항 (제332조) ○ 판결의 방법-다수결(제342조) ○ 판결의 종류(제343조) - 형벌적용, 사회적 교양회부, 형벌면제, 무죄판결 ○ 손해보상청구의 해결(제350조) ○ 판결 · 판정시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에 대한 처리 절차(제349조) ○ 판결서의 작성(제353조) - 첫부분(이유부분)의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날짜와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판결의 선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서의 기재요건(제40조) • 재판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거 • 법인인 때는 그 명칭, 사무소 •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 성명, 변호인의 성명 -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323조) • 범죄될 사실 •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범죄성립 · 조각이유, 형의 가중 · 감면 이유에 대한 판단 - 주문 • 관할위반, 형의 선고 · 선고유예 · 면제, 무죄, 면소, 공소기각(제319조, 제321조제1항, 제322조, 제325조 내지 제328조) • 형의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 노역장 유치기간, 몰수, 압수장물 환부, 재산형의 가납 등(제321조 제2항, 제332조 내지 제3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주소 •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과 그에 대한 증거의 설명 • 손해보상청구와 그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 그 밖의 사건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 - 다음부분(주문부분)의 기재 사항 • 피소자의 유무죄 • 적용법조, 형벌, 교양처분 • 손해보상청구, 증거물, 구속 처분, 재산담보처분 - 상소절차 지적 ○ 판결선고의 명의(제347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판결 선고 ○ 제1심판결 · 판정에 대한 피소자 · 변호인 · 손해보상청구자의 상소, 검사의 항의(제357조) ○ 상소 · 항의의 제기에 의한 판결 · 판정의 집행중지(제360조) ○ 판결의 선고와 피소자 즉시 석방(제348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판결의 선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제331조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죄판결 - 면소판결 - 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 판결 - 공소기각 판결 - 벌금·과료 판결 ○ 재판의 확정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소제기기간의 도과(제343조, 제358조, 제374조 등 참조) - 약식절차 종료 후 정식재판 청구 포기(제453조, 제457조 등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판결 - 사회적 교양 판결 - 사건기각 판정 -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중앙재판소 소장은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제외한 판결, 판정의 집행정지 가능 ○ 판결의 확정시기(제36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소·항의 없이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 - 상소·항의 있으나 제2심재판소가 제1심판결을 지지한 경우 - 상소·항의가 불가능한 판결인 경우
상 소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3심제 ○ 상소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에 대한 상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소: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제357조) • 상고: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제371조) - 결정에 대한 상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제402조) •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제4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2심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심 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상소·항의 불가(제359조) ○ 상소의 종류(제35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의: 판결·판정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 - 상소: 판결·판정에 대한 피소자·변호인·손해보상청구자의 이의제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상 소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소제기관자 - 검사·피고인·변호인 및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친족 등 (제340조, 제341조) ○ 검사의 상소권(제338조제1항) ○ 검사의 항고권(제339조) ○ 상소제기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소·상고: 7일(제358조, 제374조) - 즉시항고: 3일(제405조) - 보통항고: 무기한(제40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소제기관자(제357조, 제358조) - 피소자·변호인·손해보상 청구자는 상소 - 검사는 항의 ○ 검사의 상소 - 검사의 항의대상(제3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구역)·군검찰소 검사: 시(구역)·군 인민재판소의 판결·판정 • 도(직할시)검찰소 검사: 도(직할시) 및 인민재판소의 판결·판정 • 특별검찰소 검사: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판정 • 중앙검찰소 검사: 시·도(직할시) 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의 판결·판정 - 상급검찰소 검사는 하급검찰소 검사의 부당항의 취소 가능 ○ 상소제기기간(제3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소·항의의 제기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서·판정서 등본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 상소, 항의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연장 가능 - 판결서등본 송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판정일로부터 2일 내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상 소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소장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 (제359조, 제375조, 제406조) ○ 상소제기의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소제기에 의해 재판확정·집행정지(통설) • 보통항고 및 가납재판 제외 (제409조, 제334조제3항 참조) ○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불가, 비상상고 가능(통설) ○ 상소심의 구조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고심의 사후심적 운영(통설, 제384조 참조) - 소송기록 접수 즉시 상소인 및 상대방에 통지(제361조의2, 제399조) - 항소심 위한 피고인 출정 및 궐석심리(제365조)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음(제368조, 제396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소장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소장·항의서는 제1심재판소에 제출(제361조) - 제1심재판소는 상소·항의 기간 경과 후 상소장·항의서에 사건기록 첨부하여 상급재판소에 제출 ○ 상소제기의 효력(제36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의 제기는 판결·판정의 집행 정지 ○ 중앙재판소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 불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 비상상소 가능(제359조) ○ 상소심의 구조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변호인에게 재판 3일 전에 제2심재판날짜 통지 (제369조) - 판사 3명으로 구성(제365조) - 2심재판은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심리해결(제366조) - 판사의 사건보고, 검사·변호인의 의견 청취(제371조)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소자의 상소에 근거 판결 취소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1심재판소는 원심형벌보다 중한 형벌 불가(제381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상 소 제 도	○ 대응규정 없음	○ 부대판정(제382조) -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에도 필요시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판정으로 지적 - 제1심재판소는 그 지적에 따를 의무부담
비 상 구 제 절 차	○ 비상상고 이유(제441조) - 심판의 법령위반 ○ 비상상고 신청권자(제441조) - 검찰총장 ○ 비상상고 관할법원(제441조) - 대법원	○ 비상상소 이유 - 본질적인 법령위반(제391조) ○ 비상상소 신청권자(제389조) - 중앙재판소장 - 중앙검찰소장 ○ 비상상소 관할법원(제385조) - 중앙재판소 판사회의 -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 ○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의 구성: - 중앙재판소장, 부소장, 동재 판소 판사로 구성(제387조) - 검사의 참가(제388조) •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 앙검찰소장이,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 소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 ○ 비상상소 신청을 위한 기록 송부 청구 - 비상상소 제기를 위한 기록 송부 청구(제393조, 제394조) • 중앙재판소장·중앙검찰소 장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가능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비 상 구 제 절 차	○ 대응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각 그 관할내 사건에 대하여 가능 • 비상상소 제기할 사건은 의견 첨부하여 중앙재판소장 또는 중앙검찰소장에게 송부 • 비상상소 제기 안할 사건기록은 즉시 반송 - 기록송부 청구사건 판결·판정의 집행정지(제395조) • 중앙재판소장·중앙검찰소장의 집행정지 가능 • 중앙재판소장의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정지 불가 ○ 비상상소 제기기간(제390조) - 제한이 없음 - 유죄판결에 대한 비상상소는 판결을 받은 자가 죽은 후에도 가능
재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이유(제420조) -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거서류·증거물의 위조·변조가 증명된 때 -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언·감정·통역·번역의 허위가 증명된 때 -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후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사유 - 새로운 사실의 발견(제409조) • 판결·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었을 때 • 판결·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로서 재판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알려졌다 때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재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재판에 의하여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변경된 때 - 유죄선고자에 대하여 무죄·면소를, 형선고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경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 -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침해로 유죄선고 받은 사건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때 - 재판·수사 등에 관여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 재심청구권자(제4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 유죄선고 받은 자 - 유죄선고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 유죄선고 받은 자의 사망·심신장애시 그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 ○ 재심청구의 관할(제4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판결의 법원 ○ 재심청구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집행 종료, 형집행 면제 후에도 재심청구 가능(제4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신청권자(제4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기관, 기업소, 단체 ○ 재심신청의 상대방(제4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 재심신청의 관할(제40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 ○ 재심신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죄판결 받은 자의 사망 후에도 재심신청 가능(제408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재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청구받은 법원은 필요시 합의부원에게 청구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법원 판사에게 위탁 가능 (제431조) - 재심청구결정시는 청구자와 상대방의 의견청취의무 부담, 유죄선고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의 청구시는 유죄선고 받은 자의 의견청취 (제432조) -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 위반 혹은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된 때는 결정으로 기각(제433조, 제434조)하고,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는 재심개시 결정(제435조) - 재심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제438조제1항) • 사망자 또는 회복불가능한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청구시, 유죄선고 받은 자가 재심판결 전에 사망 혹은 회복불가능한 심신장애자로 된 때는 공판절차정지(제306조제1항), 공소기각결정(제328조제1항 제2호)에 관한 규정은 적용배제(제438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신청을 받은 검사는 개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 또는 재량으로 1개월 내 필요한 조사 후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검찰소에 송부 (제410조) - 중앙검찰소장은 재심제기 신청이유가 정당할 경우 중앙재판소에 재심제기, 부당할 경우는 신청거부 결정 (제412조) - 재심심리(제4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사건보고로 시작 • 심리 후 판정 • 심리날짜는 3일 전 중앙검찰소에 통지(제413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재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기각결정(제433조, 제434조 제1항) - 재심개시결정(제435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판정(제4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이유가 정당한 경우 판결·판정 취소 후 사건을 예심 또는 제1심 재판소에 반송 또는 기각 - 재심제기 이유가 부당할 경우 재심거부 판정 - 재심신청한 공민 등에게 48시간 안으로 통지 ○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 받은 후 1개월 내 처리(제40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에게 송부(제418조)
재 판의 집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집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확정 후 집행 원칙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통산(형법 제57조 참조) • 법정통산(제482조제1항, 제3항) ○ 재판집행지휘(제46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법원 대응 검찰청 검사 의 지휘원칙 - 성질상 법원·법관의 지휘를 요할 경우에는 법원·법관이 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집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판정의 집행시기 (제419조) -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 기간 (제425조) • 판결집행일로부터 계산 •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어 있는 경우는 구류일로부터 계산 ○ 재판집행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확정 후 재판장은 집행 기관에 집행지휘문건 송부 (제420조) - 검사의 판결·판정집행 감시 (제421조) * 사형집행시 검사 참가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재판의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집행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필요(제463조) ○ 자유형의 집행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적 집행정지(제47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장애로 의사능력 없게 된 자에 대하여 심신장애 회복시까지 집행정지, 병원 등에서의 인도 • 인도처분시까지 교도소·구치소에의 구치, 동 기간의 형기산입 - 임의적 집행정지사유(제471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건강침해 또는 생명보전 불가 염려 있는 때 • 70세 이상인 때 •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 70세 이상, 중병, 불구자의 직계존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 없는 때 •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 없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 있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집행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 필요(제419조) - 사형은 사형집행지휘문건 받은 후 집행(제422조) - 집행결과를 3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송부(제423조) ○ 자유형의 집행정지 및 가석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의 집행정지(제4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병으로 판결집행 불가시 완쾌시까지 집행정지 가능 •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집행정지 - 병원수용기간의 노동교화형 집행기간 산입(제425조) - 노동교화형 집행정지는 집행기관책임자가 관할 도(직할시) 검찰소소장 또는 중앙검찰소소장에게 제기(제434조) - 검찰소 소장이 취소하거나 관할 도(직할시) 재판소 또는 중앙재판소에 제기 - 일시적인 정신병 등을 이유로 한 경우에도 관리책임자가 해당 검찰소 소장에게 제기, 해당 검찰소 소장은 취소하거나 판결을 내린 재판소에 제기(제434조)

구분 항목	남 한	북 한
재판의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형 등의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 과료 · 몰수 · 추징 · 과태료 · 소송비용 · 비용배상 · 가납재판의 집행 •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제477조) • 상속재산 및 합병 후 법인 재산에 대하여도 집행 가능(제478조, 제479조) - 노역장 유치집행(제492조) ○ 재판에 대한 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선고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의신청가능(제488조) • 법원은 결정, 동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가능(제491조)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선고법원에 이의신청 가능(제489조) • 법원은 결정, 동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가능(제49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 수형자의 가석방은 해당재판소가 심리해결(제435조) ○ 재산몰수형 등의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몰수형 집행은 집행문건 받은 후 1개월 내 재판소 집행원이 담당(제298조) - 2명의 임회원을 세우며, 재산몰수목록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재산몰수목록등본을 교부(제428조) - 손해보상재산의 집행은 재판소의 집행원이 담당(제429조) - 재산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집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제430조) ○ 재판에 대한 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 · 판정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은 재판소가 담당하며, 심리날짜를 3일전에 검사에게 통보(제438조) - 판결 · 판정집행과 관련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함(제439조)

V. 개정 북한형법

1950. 3. 3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 제정
1974.12.1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차 개정)
1987. 2.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 (제2차 개정)
1995. 3.1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 (제3차 개정)
1999. 8.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제4차 개정)
2004. 4.2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제5차 개정)

제 1 장 형법의 기본

제 1 조(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 3 조(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 4 조(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누우친 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자수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

대히 용서하도록 한다.

제 6 조(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 7 조(형벌적용의 원칙) 국가는 범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註改悛)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 8 조(형법의 대인적 및 공간적 효력원칙) 이 법은 범죄를 저지

른 공화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 국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 때마다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 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9 조(시간적 효력에서 불소급 및 소급원칙) 범죄를 저지른 자

에게는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범죄로 보지 않았거나 형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일반규정

제 1 절 범 죄

제 10 조(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

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 11 조(형사책임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 12 조(형사책임무능력상태에서 사회적위험행위를 한 자의 처리)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앞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정신병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사, 예심, 재판 당시 정신병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 14 조(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이 없거나 작아 가벌성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 15 조(정당방위)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적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 16 조(긴급피난)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이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 17 조(피해자의 사전요구에 기초한 가해자의 형사책임) 피해

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그의 인신 또는 재산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 18 조(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 줄 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고의적 중살인죄, 강도죄, 강간죄에 대하여서는 앞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19 조(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정한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는 미수, 범죄의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 20 조(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중지한 경우에는 그 만둔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 21 조(공범사건에서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제 22 조(공범사건에서 추진자, 방조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가 아닌 공범사건에서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추진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가볍

게 처벌한다.

제 23 조(특수적 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적 표징을 요구하는 범죄의 실행자가 해당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러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범죄실행자, 추진자, 방조자도 공동 범죄실행자, 추진자, 방조자로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 24 조(은닉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 25 조(불신고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 26 조(방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 2 절 형 별

제 27 조(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무기로동교화형
3. 유기로동교화형
4. 노동단련형
5. 선거권박탈형

6. 재산몰수형

7. 자격박탈형

8. 자격정지형

제 28 조(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제 29 조(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제 30 조(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정지된다.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 31 조(로동단련형)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로동단련형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한다.

제 32 조(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범죄와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반국가 범죄와 반민족 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 선거권박탈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선거권박탈형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 33 조(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식량과 일용필수품, 돈을 남겨놓는다.

제 34 조(재산몰수형 취소 및 사건기각시 재산보상)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었거나 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값을 돌려준다.

제 35 조(재산몰수당한 자의 빚처리) 재산을 몰수당한 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 처분이 있는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제 36 조(자격박탈형)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박탈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제 37 조(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정지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자격정지형 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 38 조(형벌의 량정) 형벌량정은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공모관계,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 같은 것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39 조(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자기의 보호 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 40 조(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6. 자백을 하였을 경우
7. 많은 공로를 세운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8.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9.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제 41 조(형벌의 가중 경감범위)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형벌의 절반까지의 범위 안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보다 높게 또는 낮게 줄 수 없다.

제 42 조(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정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의 최저한도보다 더 낮게 형벌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보다 낮게 줄 수 있다.

제 43 조(범죄의 병합조건)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병합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범죄로 되었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수적 전제로 되었을 경우에는 병합할 수 없다.

제 44 조(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별로 형벌을량정한 다음 제일 높이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하는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께 적용한다. 판결의 선고는 이 조로 한다.

제 45 조(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 계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을 하나의 형벌기간으로량정할 경우에는 제재의 도수가 높은 종류의 형벌로 하며 노동단련형 기간 2일을 유기로동 교화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 46 조(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

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에 대하여서는 형벌을량정하여 남은 형기에 합한다.

제 47 조(이상, 이하에 대한 해석)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지정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년뿐 아니라 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제 48 조(형벌집행기간 계산)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범죄자가 구속된 날부터 형벌기간이 마감되는 날까지로 한다. 구속되어 있는 기간의 형벌집행기일 계산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다.

제 49 조(사회적 교양처분)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

제 50 조(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형벌량정)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저지른 범죄의 형사소추 시효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량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량정한 형벌을 합한다.

제 51 조(집행유예 적용조건과 기간) 5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을 받은 자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어 노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 3년까지 노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2. 3년 이상 5년까지 노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

제 52 조(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을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양정한 형벌에 합한다. 합한 형벌의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제 53 조(특사, 대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면제는 특사 또는 대사로 한다. 특사, 대사의 실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 54 조(만기 전 석방)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으며 무기로동교화형은 15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거나 유기로동교화형으로 변경하여 줄 수 있다. 형벌집행의 면제 또는 변경과 관련한 제기는 형벌집행기관이 하며 이 제기는 해당 재판소가 심리, 판정한다.

제 55 조(형벌집행이 끝난 자의 법적지위) 특사, 대사를 받은 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하며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56 조(형사소추 시효기간)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2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2.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년
3. 5년 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년

4.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년

5. 무기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년

제 57 조(형사소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와 고의적 중살인범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 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 58 조(형사소추 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사유) 이 법 제56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거나 수사시작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제 3 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 1 절 반국가범죄

제 59 조(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 60 조(테로죄) 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로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 61 조(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62 조(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 63 조(간첩죄)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64 조(파괴암해죄) 반국가 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65 조(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겼거나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게 하였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였거나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66 조(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 절 반민족범죄

제 67 조(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 68 조(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69 조(조선민족 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 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제 70 조(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1 조(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2 조(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4 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 73 조(결정, 명령, 지시 집행태만죄)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4 조(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전략예비물자의 조성,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5 조(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 전투기술기재와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6 조(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과실적 파손죄)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과실로 파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7 조(군사경비근무질서 위반죄) 민간군사훈련에 동원된 자가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8 조(무기, 탄약 비법휴대, 양도죄)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9 조(군수품 잃어버린 죄) 군수품을 잃어버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군수품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0 조(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죄)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않았거나 그 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1 조(군수품생산에서 오작품, 불합격품 생산죄) 군수품생산부문 일군이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제품규격, 제품검사에 관한 질서를 어기고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2 조(군수품생산용 자재, 군수품 류용죄) 군수품생산부문 책임일군이 군수품생산용 자재와 군수품을 다른 목적에 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3 조(군사복무동원 기피죄)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전시 또는 준전시에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4 조(기피자, 탈영자 은닉죄) 군사복무동원 기피자, 탈영자라는 것을 알면서 숨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5 조(군사임무수행 방해죄) 경비근무, 차단근무, 단속근무, 기
통임무 같은 군사임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
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 86 조(군인으로 가장한 죄) 군인으로 가장하여 인민군대의 위
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
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87 조(군수품을 팔고 산 죄) 군수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팔았
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8 조(국방비밀루설죄) 국방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방비밀문
서를 잃어버린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방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방비밀루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
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
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5 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 1 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 89 조(국가재산 훔친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
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
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2년 이상 9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9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0 조(국가재산 빼앗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1 조(국가재산공갈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2 조(국가재산 속여 가진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 가진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8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3 조(국가재산횡령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 자 또는 관리일군이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상 9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9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4 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략취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5 조(국가재산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강도한 경우에는 8년 이상 1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강도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12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6 조(국가재산공동탐오죄)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각종 총화, 후방사업의 명목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의 공동탐오를 지시하였거나 조직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7 조(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중요한 생산수단 또는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8 조(국가재산 과실적 파손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과실로 파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 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 99 조(화폐위조죄) 공화국 화폐와 공화국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위조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
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0 조(위조화폐사용죄) 위조된 화폐라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1 조(증권위조죄) 국가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자는 2년 이하
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2 조(위조증권사용죄) 국가의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
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3 조(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무현금결제
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결제하여 주었거나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4 조(외국화폐매매죄) 리기적 목적 밑에 공화국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비법적으로 바꾼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5 조(공화국화폐를 다른 나라로 내간 죄) 비법적으로 공화국 화폐를 다른 나라로 내간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6 조(외화관리질서위반죄)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7 조(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 산 죄)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았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8 조(탈세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09 조(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은 죄)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았거나 적게 바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10 조(개인의 상적행위죄) 비법적으로 개인이 상적행위를 하여 대량이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

한다. 앞 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11 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적행위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조직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12 조(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 죄) 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13 조(상표권침해죄) 비법적으로 상표를 만들었거나 매매하였거나 상표없는 상품을 판매, 수출입하였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14 조(거간죄) 거간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15 조(귀금속, 유색금속 밀매죄)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비법적으로 팔고 산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비법적으로 팔고 산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16 조(밀수죄) 밀수행위를 한 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 항의 행위를 관리일군이 한 경우에는 4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17 조(수출입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수출입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18 조(고리대죄) 고리대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19 조(로력착취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20 조(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 주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계설비와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 주고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21 조(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 위반죄) 철도, 수상, 항공운수부문 일군이 운수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교통운수질서를 어겨 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손시켰거나 그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많은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8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22 조(운수수단 리용질서 위반죄) 운수수단의 리용질서를 어겨 교통운수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많은 운수수단을 파손시켰거나 화차, 짐배

를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23 조(운수수단의 운행을 지체시킨 죄) 철길, 도로, 배길에 비법적으로 장애물, 차단물을 설치하였거나 표식물을 없애버렸거나 운수일군에게 폭행, 협박하여 운수수단의 운행을 지체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운수수단의 운행을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24 조(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한 죄) 무역계약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경제계약을 잘못 맺었거나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25 조(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한 죄) 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조직하였거나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26 조(비법적으로 외화원천을 동원한 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을 동원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27 조(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운 죄)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워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28 조(인민경제계획을 고친 죄) 인민경제계획을 비준한 기관

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29 조(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죄)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을 상당히 미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30 조(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죄)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 항의 행위로 국가의 정책작성과 집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31 조(계약규률위반죄)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32 조(계획에 없는 제품생산, 건설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건설을 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33 조(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34 조(비법적인 경제관리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경제관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 135 조(국가재산을 비법적으로 꾸어 주었거나 꾀 죄) 화폐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꾀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36 조(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랑비, 사장죄) 원료, 자재, 자금 또는 설비를 류용, 랑비하였거나 사장시켜 경제관리 운영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37 조(재산의 부패, 변질, 류실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관리하여 대량의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38 조(설비, 물자, 자재의 비법처분, 취득죄)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비법적으로 설비, 물자, 자재를 주었거나 바꾸었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39 조(국가재산을 략취하여 기관에 넘겨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40 조(인수품, 수매품 처분죄) 리기적 목적으로 인수하였거나

공급받았거나 구매받은 원료, 자재, 상품을 판매, 처분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41 조(오작품, 불합격품 생산죄)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규격에 관한 질서를 어겨 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42 조(품질감독질서위반죄) 품질감독질서를 어기고 제품의 질등급을 그릇되게 평가하였거나 오작품, 불합격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묵인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43 조(설비점검, 보수를 하지 않은 죄) 설비점검, 보수질서대로 조직사업을 하지 않아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생산을 멈추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특히 중요한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상당한 기간 생산을 멈추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44 조(오작설계, 오작시공죄) 오작설계로 시공하게 하였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는 설계를 어기고 시공하여 인명피해를 일으켰거나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45 조(준공검사 및 리용허가를 무책임하게 한 죄)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설비의 리용허가를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여러명의 인명피해 그 밖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46 조(준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한 죄)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설비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여러 명의 인명피해 그밖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47 조(국가건물구조변경죄) 비법적으로 국가의 건물구조를 변경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48 조(국가건물을 보수하지 않은 죄) 국가의 건물을 제때에 보수하지 않아 못쓰게 만들었거나 수명을 줄인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49 조(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받은 죄)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고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넘겨 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50 조(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 농업지도기관 일군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지도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51 조(종자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 위반죄) 종자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를 어겨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52 조(농업생산과학기술공정위반죄)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겼거나 농산작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53 조(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 수의방역 또는 사양관리질서를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집짐승을 무리로 죽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54 조(양어사업질서위반죄) 양어수역의 관리, 물고기 자원의 조성과 보호, 물고기의 생산 및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55 조(천해양식질서위반죄) 천해양식질서를 어기고 양식장관리를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56 조(상품공급질서위반죄) 상품을 제때에 인수하지 않았거나 상품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57 조(상품판매질서위반죄) 상품을 안면, 무더기 또는 그 성질을 고쳐 팔았거나 혹은 값을 속여 팔았거나 상점매대를 리용하여 개인의 물품을 팔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58 조(량정질서위반죄) 량곡수매, 수송, 가공, 수급,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59 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밀주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 밑에 비법적으로 술, 맥주를 생산하게 하였거나 승인받지 않은 원료로 술, 맥주를 생산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60 조(개인의 밀주죄) 개인이 장사를 목적으로 술, 맥주를 만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량곡을 소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61 조(생산제품의 비법처분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개인에게 생산제품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62 조(계량기구 량목위반죄)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친 자 또는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63 조(전력생산, 공급질서위반죄) 전력부문 일군이 전력생산, 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64 조(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 설비를 제작하여 대량의 자재와 자금, 로력을 낭비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65 조(전력사용질서위반죄) 전력사용질서를 어겨 대량의 전력을 낭비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66 조(체신사업을 무책임하게 한 죄) 체신부문 일군이 전기통신, 우편통신보장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방송시설의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통신, 방송을 상당한 기간 중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67 조(전화설치 및 사용을 방해한 죄) 리기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승인되지 않은 전화를 설치하여 주었거나 승인된 전화설치를 제때에 하여 주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68 조(해사감독질서위반죄) 해사감독질서를 어기고 배 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기술 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69 조(해난구조의무 기피죄) 해난구조를 의뢰받은 자가 위험에 처한 사람, 배, 짐을 구조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70 조(가격사업질서위반죄) 가격사업질서를 어기고 가격을 제정, 적용하였거나 국가가 정한 가격을 승인없이 고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71 조(난방열 도용죄)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관망에서 많은 난방열을 뽑아냈거나 관망에 설치된 변(註 : 배관이나 기계설비 안으로 흐르는 고체, 액체, 기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을 조작하여 난방열공급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72 조(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 주민연료부문 일군이 주민연료확보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3 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 173 조(토지람용, 폐경죄) 승인없이 많은 면적의 토지를 람용하였거나 폐경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74 조(토지류실죄)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아 많은 면적의 토지를 류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75 조(지하자원개발 및 채굴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이 지하자원의 개발 및 채굴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76 조(금채취, 제련죄) 비법적으로 금을 채취, 제련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77 조(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를 어겨 산림자원에 대량

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78 조(산림람도벌죄) 산림을 람도벌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79 조(과실산불죄)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자원에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80 조(산을 개간한 죄) 비법적으로 산을 개간하여 산림보호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81 조(수산 및 동식물자원 보호관리질서위반죄)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물고기와 이로온 동식물을 잡았거나 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82 조(환경보호질서위반죄)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켜 공해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83 조(하천관리질서위반죄) 하천관리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84 조(도로관리질서위반죄) 도로를 정상적으로 수리, 정비, 보수하지 않아 운수수단의 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4 절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 185 조(노동보호 및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노동보호 및 노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명피해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86 조(노동안전질서위반죄) 노동안전질서를 어겨 인명피해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87 조(교통사고죄) 자동차, 전차, 트럭또르, 오토바이 같은 륜전기재를 운전하는 자가 도로교통안전질서를 어겨 인명피해 그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이 죽었거나 앞 항의 행위를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88 조(로력배치, 조절, 동원을 무책임하게 한 죄) 노동행정부문 일군이 로력과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입직을 거부하였거나 배치하지 않았거나 로력의 동원, 조절사업을 되는대로 하여 로력을 낭비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89 조(자의적인 해직죄) 정당한 리유없이 종업원을 내보냈거나 조동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90 조(분배질서위반죄) 노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하여 생활비, 상금을 부당하게 적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91 조(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 죄)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192 조(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 죄) 녀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로동을 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6 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 193 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유연성자기원판,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 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94 조(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씨디-롬 같은 기억매체를 여러 번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95 조(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 수집, 보관, 류포죄) 반 국가목적이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빼라, 사진, 록화물, 인쇄물, 유인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96 조(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파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97 조(력사유적도굴죄) 력사유적을 도굴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98 조(력사유물 밀수, 밀매죄) 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준국보 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보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199 조(저작, 발명, 창의고안묵살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그릇되게 평가하여 묵살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00 조(저작, 발명, 창의고안도용죄) 리기적 목적에서 다른 사

람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01 조(컴퓨터망침입죄)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컴퓨터망에 침입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02 조(정보파손죄) 컴퓨터같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국가의 중요 정보기억매체를 파손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03 조(허위정보입력 류포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컴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시켰거나 유포시켜 정보처리에 장애를 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04 조(교육강령, 과정안을 무책임하게 집행한 죄) 교육부문 일군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육강령과 과정안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무책임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05 조(후비양성사업을 부당하게 한 죄) 퇴물을 받았거나 직권을 람용하였거나 협잡의 방법으로 학교추천과 입학, 학생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06 조(체육선수선발을 부당하게 한 죄) 퇴물을 받았거나 직권을 람용하여 중요 체육경기에 출전할 선수선발을 바로 하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07 조(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 유치원, 탁아소 일군이 어린이 보호관리 질서를 어겨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08 조(치료거부죄) 의료일군이 특별한 리유없이 왕진과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09 조(의료사고죄) 의료일군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잘못하였거나 약을 잘못 주어 환자의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10 조(불량의약품, 의료기구 생산죄) 의약품 제조 또는 의료기구 제작을 잘못하였거나 의약품, 의료기구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11 조(비법의료죄) 의료일군이 아닌 자 또는 의료일군이라 하더라도 병원 밖에서 리기적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의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12 조(위생방역사업 태만죄) 위생방역 일군이 방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13 조(국경검역을 무책임하게 한 죄) 국경검역 일군이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14 조(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리용죄) 병치료 또는 리기적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태, 혈액을 취득, 매매하였거나 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15 조(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 리기적 목적으로 가짜의약품, 식료품을 만들었거나 판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가짜의약품, 식료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만들었거나 판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장애자로 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16 조(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17 조(비법마약사용죄)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18 조(마약밀수, 밀매죄) 마약을 밀수, 밀매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 번 또는 공모하여 하였거나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 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 1 절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 219 조(집단적 소요죄) 반국가 목적이 없이 집단적으로 국가 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반항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앞 항의 행위로 살인, 파괴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20 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 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공모하여 하였거나 앞 항의 행위로 해당부문의 사업에 혼란을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21 조(법일군의 직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 모욕 또는 직권 람용을 하여 법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공모하여 하였거나 앞 항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22 조(허위날조, 류포죄) 반국가 목적이 없이 국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을 꾸며냈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하여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23 조(공인, 직인의 비법사용, 위조죄) 공인, 직인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24 조(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사용죄) 리기적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문서, 공민증, 증명서를 감추었거나 처분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25 조(증명서매매죄) 증명서를 팔았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26 조(출판질서위반죄) 출판질서를 어기고 출판물을 인쇄, 발행, 보급하였거나 타자, 복사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27 조(방사성, 폭발성, 인화성물질 수송질서위반죄)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물질 수송질서를 어기고 그것을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인명피해 또는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로 여러 명의 인명피해 또는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28 조(경비근무질서위반죄)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29 조(폭발물 비법휴대, 사용, 양도죄) 폭약, 퇴관,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나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30 조(고의적 비밀루설죄) 국가비밀을 고의적으로 루설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가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루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31 조(과실적비밀루설죄) 국가비밀을 과실로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문서를 잃어버린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32 조(령공, 령해침입죄) 다른 나라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공화국 령공, 령해에 들어왔거나 령공, 령해 밖으로 나갔거나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33 조(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34 조(국경출입협조죄) 국경관리부문 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35 조(항해, 어로구역 리탈죄) 허가없이 지정된 항해구역 또는 어로구역을 이탈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36 조(거짓 신고, 진술죄) 범죄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37 조(증인협박죄)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38 조(복수죄) 복수할 목적으로 직무상 의무를 수행한 자 또는 신고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구타, 폭행,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39 조(일반범죄은닉죄) 유기로동교화형 이상의 형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살인, 강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40 조(일반범죄 불신고죄) 이 법 제95조, 제278조, 제302조의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41 조(구속인, 교화인 도주죄) 구속 중에 있거나 형벌집행 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경비원에게 폭행을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42 조(뇌물죄) 관리일군이 아닌 자가 뇌물을 주었거나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43 조(봉인손상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밀실, 문서고, 자

료보관실, 귀중품보관실에 한 봉인이나 법기관에서 한 봉인을 손상시켜 해당 부문의 사업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44 조(부당한 신소죄) 리기적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45 조(대외적 권위를 훼손시킨 죄) 공민이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 절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제 246 조(직권람용죄) 관리일군이 리기적 목적으로 직권을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47 조(월권행위죄) 관리일군이 상급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그의 승인없이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48 조(직무태만죄) 관리일군이 상급으로부터 받은 명령, 지시 또는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데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49 조(물질적 부담을 시킨 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

이 지원, 후원, 부조, 사업보장의 명목으로 종업원에게 물질적 부담을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강요하여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50 조(신소청원묵살죄)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51 조(국가기관 권위훼손죄) 관리일군이 세도를 썼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52 조(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앞 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53 조(사건과장, 날조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54 조(비법석방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범죄를 가볍게 하여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55 조(부당 판결, 판정죄) 재판일군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56 조(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 정당한 리유없이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57 조(관리일군 퇴물죄) 관리일군이 퇴물을 주었거나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물을 특히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았거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받은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 장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 258 조(불량자행위죄) 과립치한 불량자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59 조(패싸움죄)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앞 항의 행위로 살인, 파괴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60 조(미성인 범죄 추진 죄)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거나 불량자

로 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61 조(매음죄) 매음행위를 여러 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매음행위를 하였거나 앞 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62 조(음탕한 행위죄)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앞 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63 조(직권참용죄) 관리일군이 아닌 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또는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의 직권을 참용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64 조(거짓행세죄) 검열원, 단속원, 감독원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65 조(칭호참용죄) 리기적 목적으로 국가적 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여러 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66 조(도박죄)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67 조(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여러 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68 조(미신행위 조장죄) 리기적 목적 그밖의 동기에서 여러 사람에게 미신행위를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많은 사람에게 하였거나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69 조(실력행사죄) 인신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차지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70 조(비법혼인죄) 탐욕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71 조(늙은이, 어린이 보호책임회피죄) 늙은이, 어린이 또는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자가 그를 고의적으로 돌보지 않아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72 조(학대괄시죄)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거나 자기의 보호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하여 그의 건강에 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73 조(습득물횡령죄) 주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

지 않고 가진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74 조(사례금, 리득금을 바치지 않은 죄)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았거나 생긴 대량의 사례금 또는 리득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졌거나 공동탐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75 조(략취물건거래죄) 략취한 물건인 줄 알면서 가졌거나 샀거나 팔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76 조(묘파손죄) 묘를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묘를 파손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77 조(엄중한 결과발생 방임죄)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당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그밖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9 장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제 1 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제 278 조(고의적 중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 279 조(고의적 경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80 조(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상 6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81 조(정당방위초과살인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82 조(과실적 살인죄) 사람을 과실로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83 조(고의적 중상해죄)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협할 정도의 중상을 입혔거나 눈, 귀 그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겼거나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었거나 앞 항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또는 공모하여 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84 조(발작적 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85 조(정당방위초과 중상해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86 조(과실적 중상해죄) 사람에게 과실로 중상을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실로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87 조(고의적 경상해죄)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경상을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 사람에게 경상을 입혔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경상을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88 조(폭행죄) 사람에게 폭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공모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89 조(어린이 훔친죄) 리기적 목적 또는 복수적 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90 조(유괴죄) 리기적 목적에서 사람을 유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사람을 유괴하였거나 공모하여 사람을 유괴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91 조(비법자유구속죄)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92 조(모욕 및 명예훼손죄)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제 293 조(강간죄) 폭행, 협박하였거나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른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94 조(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앞 항의 행위로 여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95 조(미성인 성교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강요하여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 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 296 조(개인재산 훔친 죄) 개인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97 조(개인재산 빼앗은 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8년 이상 1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98 조(개인재산 공갈죄) 개인의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8년 이상 1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99 조(개인재산 속여 가진 죄) 개인의 재산을 속여 가진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00 조(개인재산 횡령죄)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

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01 조(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략취죄) 개인재산 략취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02 조(개인재산 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협을 주는 폭
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
용하였거나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도하였거나 강도행위로 사람
을 죽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03 조(개인재산 고의적 파괴죄) 개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 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 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상 10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VI.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주체81(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 보충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 1 조(형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계급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 3 조(군중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

제 4 조(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 5 조(인권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 6 조(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 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 7 조(형사사건취급에서 조선어의 사용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조선말로 하도록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자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 수 있다.

제 8 조(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의 준수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

제 2 장 일 반 규 정

제 1 절 형사소송관계자

제 9 조(형사소송관계자) 형사소송관계자에는 형사소송담당자와 변호인,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같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는 자가 속한다. 형사소송담당자는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이다

제 10 조(수사의 담당자) 수사는 해당 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필요에 따라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예심의 담당자) 예심은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 인민무력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 12 조(기소의 담당자)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한다.

제 13 조(재판의 담당자) 재판은 재판소가 하며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

제 14 조(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의 담당자)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제 15 조(비밀엄수 및 형사사건조사방해금지)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변호인,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손해보

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같은 형사소송관계자는 형사사건취급처리와 관련된 비밀을 지키며 형사사건의 취급 처리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 절 형사소송에 관여할 수 없는자

제 16 조(리해관계에 따라 참가할 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자신이나 가족, 친척관계에 있는 자가 피해자, 범죄자이거나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결과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7 조(형사소송임무를 겸임할 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 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 검사는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도 자기가 취급한 형사사건을 심리해결하는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으로 될 수 없다.

제 18 조(같은 사건을 다시 예심할 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67조의 요구를 어기여 형사사건을 과장날조한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을 담당할 수 없다.

제 19 조(같은 사건을 다시 감시, 기소할 수 없는 사유) 형사사건을 과장날조한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검사에게도 감시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

한 감시와 기소를 다시 담당할 수 없다.

제 20 조(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는 사유)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심이 충분하지 못하여 재판소가 반송하였던 형사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에는 참가할 수 있다.

제 21 조(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는 사유)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 22 조(증인으로 될 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7조에 규정된 자와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자는 증인으로 될 수 없다.

제 23 조(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 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6조, 제17조의 사유가 있거나 국가적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는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 수 없다.

제 24 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사, 예심단계에서는 검사,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소에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시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를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하려는 자는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를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수사, 예심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형사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은 검사는 그것을 3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검사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 예심은 계속한다.

제 27 조(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재판심리에 참가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바꾼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심리할 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중지하고 재판소를 다시 구성한다.

제 28 조(형사사건취급의 포기)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자신에게 있을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제3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제 29 조(형사사건의 취급시작과 담당자)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한다.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하지 않은 사건은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예심원의 결

정, 재판소의 판정이나 예심에 넘기는 검사의 결정, 재판소의 판정이 있을 때부터 형사사건의 취급을 시작한다.

제 30 조(형사사건의 취급시작기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고에 기초하여 한다. 해당 법기관이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에 기초하여서도 형사사건의 취급을 시작한다.

제 31 조(범죄에 대한 신고 및 증거보존의무)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곧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기관에 신고하고 범죄현장,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가 못쓰게 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32 조(범죄의 신고형식) 범죄에 대한 신고는 글로 써낸다. 말로도 범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 33 조(범죄의 신고접수방법)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는 신고서를 받거나 신고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신고접수자는 신고자에게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신고조서에는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거짓신고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정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34 조(범죄신고의 의무적접수와 이송)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며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한 신고자료는 곧 해당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 35 조(범죄에 대한 신고처리결과의 통지)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처리정형을 1개월안으로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신고처리를 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제 36 조(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의 고착) 인민보안, 검찰, 재판, 안
전보위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를 해당
법규에 따라 고착하여야 한다.

제4절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 37 조(형사사건의 병합사유) 예심원, 검사, 제1심재판소는 공모
하여 범조를 저질렀거나 혼자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형
사사건으로서 각기 제기된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야
한다.

제 38 조(공모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공모하여 범죄를 저
지른 형사사건은 주모자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하나의 사건으
로 취급한다. 그러나 주모자를 모를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먼저
취급한 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공모사건은 상급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
로 취급한다. 사민이 군인과 공모하여 군사비밀보장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군사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
사건으로 취급한다. 철도종업원과 일반사민이 공모하여 철도운
수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철도부문 법기관
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 39 조(단독범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혼자서 자기가 사
는 곳 또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는 피심자, 피소자를 취급하고 있는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
건으로 취급한다. 일부 범죄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거나
군사, 철도부문 법기관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상

급법기관 또는 군사, 철도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 40 조(형사사건의 병합절차) 형사사건을 병합할 경우에는 사건병합결정을 하고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 41 조(형사사건 분리사유) 예심원, 검사, 제1심재판소는 공모하여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피심자, 피소자가 도주하거나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으로 앓고 있어 병이 나을 때까지 다른 피심자, 피소자에 대한 취급처리를 뒤로 미룰 수 없거나 관할이 서로 달라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그 사건을 분리할 수 있다.

제 42 조(형사사건 분리절차) 공모하여 저지른 형사사건을 분리하려 할 경우에는 사건분리결정을 하고 해당한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분리한 형사사건을 관할 법기관에 넘기는 절차는 이 법 제153조에 따른다.

제 5 절 형사소송의 중지

제 43 조(형사소송의 중지사유)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중지한다. 정신병, 중병에 대한 감정은 법의감정의사 또는 인민병원 의사협의회가 한다.

제 44 조(형사소송의 중지절차)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이 법 제4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2. 검사는 기소를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3. 재판소는 재판을 중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 45 조(의료처분의 절차)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 법 제46조 2호, 3호에 따라 의료처분을 적용할데 대한 결정, 판정을 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곧 알린다.

제 46 조(의료처분의 종류) 의료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환자에 대한 특별격리의료처분
2. 일시적인 정신병환자에 대한 일반격리의료처분
3. 중병에 걸린 자에 대한 지역의료처분

제 47 조(의료처분자에 대한 감시) 의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시는 그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의료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은 그의 병상태와 치료정형, 류동정형을 본인이나 보증인으로부터 통보받으며 정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48 조(의료처분 받은 자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 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결정서에 지적된 지역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2. 병치료에 전념하여야 한다.
3. 증거를 없애거나 그에 공모하는 것 같은 형사사건의 조사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49 조(보증인의 선정)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의료처분을 하는 경우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 50 조(보증인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 법 제48조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 의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 법 제48조에 규정된 의무를 어기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지역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51 조(의료처분결정의 통고)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의료처분 결정, 판정을 한 경우 의료처분 받은 자와 그의 보증인에게 결정내용과 지켜야 할 의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 52 조(형사소송중지의 해제, 취소) 형사소송중지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 법 제48조를 어긴 경우에는 형사소송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형사사건 취급을 계속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 6 절 형사사건의 기각

제 53 조(형사사건의 기각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의 행위인 경우
2. 저지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
3.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특사로 형벌이 면제되었을 경우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행위일 경우
6. 이 법에 규정된 예심기일 안에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7.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죽었을 경우

8. 정신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을 경우

제 54 조(형사사건의 분리기각사유) 공모하여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자에게 이 법 제53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기각한다.

제 55 조(형사사건의 기각형식과 절차)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이 법 제5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사원은 수사취소결정을 하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형사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검사는 형사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4. 재판소는 형사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 56 조(형사사건의 기각통지) 형사사건을 기각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그에 대하여 신고자, 피해자,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57 조(형사사건기각과 특별격리의료처분)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이 법 제46조 1호에 따라 특별격리의료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 58 조(기각한 형사사건에서 구속자, 증거물처리)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에는 구금, 구류되어 있는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를 곧 놓아준다. 이 경우 증거물처리는 이 법 제105조에 따른다.

제 59 조(기각한 형사사건에서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형사사건을 기각한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물건을 몰수하고 근

거문건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앞 항의 경우 재산담보처분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기각결정서, 판결서, 판정서에 밝혀야 한다.

제 60 조(형사사건의 기각취소)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의 기각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한다. 이 경우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자, 피해자에게는 형사사건의 기각취소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 61 조(형사사건의 기각취소효력) 형사사건의 기각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와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가지며 그 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제 7 절 사회적교양처분

제 62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사유) 사회적교양처분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 형벌을 주지 않고도 교양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 63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절차) 검사, 재판소는 이 법 제6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검사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판결, 판정을 할 수 있다.

제 64 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의 처리) 구류되어 있는 피심

자,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결정,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곧 놓아준다.

제 65 조(사회적교양처분을 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사회적교양처분결정을 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105조와 제349조에 따른다.

제 66 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한다.

제 67 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양의 담당자)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양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거주하고 있는 리(읍, 구, 동)에서 책임진다.

제 68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사유)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저지른 범죄의 형사소추시효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지운다. 이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도 함께 계산한다.

제 69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절차) 검사, 재판소는 이 법 제68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을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제 8 절 손해보상

제 70 조(손해보상의 청구자)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상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 또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재판소에 손

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 71 조(손해보상청구의 통고) 예심원,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가 저지른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72 조(손해보상 책임있는 자) 손해보상 책임있는 자로는 범죄를 저질러 물질적 손해를 준 피심자, 피소자, 범죄의 런루자 또는 범죄자의 행위에 대하여 재산적 책임을 질 자가 된다.

제 73 조(손해보상청구의 대상) 손해보상청구는 범죄로 손해를 입은 물질적 재산에 대하여 한다.

제 74 조(손해보상청구의 형식) 손해보상청구는 말로 하거나 글로 써낼 수 있다. 말로 한 손해보상청구에 대하여서는 조서에 밝힌다.

제 75 조(손해보상청구의 시기)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에서 사실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과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하지 못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 76 조(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손해보상청구의 심리는 재판심리에서 함께 한다. 그러나 손해보상청구심리가 재판심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따로 심리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

제 77 조(기각된 손해보상청구의 재청구금지) 손해보상청구를 형사재판심리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이미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한 재판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다시 그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8 조(손해보상청구와 수수료) 범죄로 인한 손해보상청구는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제 79 조(손해보상금 제출) 수사원, 예심원, 검사는 손해보상 책임 있는 자에게 손해보상금을 해당 은행에 입금시키게 하고 입금 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절 형사소송문건

제 80 조(형사소송문건작성의 목적)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형사소송행위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고착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문건을 작성한다. 형사소송행위는 문건화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 81 조(형사소송문건의 종류) 형사소송문건에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준비, 재판심리에서 작성하는 결정서, 진술서, 조서, 기소장, 판결서, 판정서 같은 것이 속한다.

제 82 조(형사소송문건의 작성방법) 형사소송문건에는 작성날자와 장소, 작성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소송행위의 법적근거와 진행과정, 결과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히고 관여한 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수정, 삭제, 보충한 곳에는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제 83 조(형사소송문건의 비공개) 형사소송문건은 법에 따라 공개 되어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열람할 수 없다.

제 10 절 형사소송기간과 문건송달, 소송비용

제 84 조(형사소송기간의 계산) 형사소송기간의 계산은 시간, 날, 달, 해로 한다. 이 경우 계산사유가 생긴 다음날 또는 다음시간

부터 계산한다.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날 24시로 형사소송 기간이 끝난다.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 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마지막 달 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끝나는 날이 국가적 휴식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제 85 조(형사소송문건의 효력기간) 상소장, 항의서, 결정서 같은 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형사소송문건을 보내야 할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당한 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문건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그 기간을 늘여줄 수 있다.

제 86 조(형사소송문건의 송달) 형사소송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접수하였을 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성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형사소송문건을 접수할 수 있다.

제 87 조(형사소송비용의 부담) 인민참심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이 형사사건조사 처리에 동원된 기간의 생활비 또는 려비를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부담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그를 부른 기관에서 로력보수와 려비를 부담한다.

제 3 장 증 거

제 88 조(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다. 증거는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확인되어야 사건 해결의 기초로 쓸 수 있다.

제 89 조(증거의 종류) 증거로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에서 얻은 자료가 된다.

제 90 조(증거물) 증거물로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썼거나 범죄의 흔적이 있는 물건, 범죄의 대상으로 된 물건 같은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 확정,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물건이 된다.

제 91 조(증거문서) 증거문서로는 그 내용이 증거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가 된다.

제 92 조(증거로 확정하여야 할 대상) 범죄의 표징을 이루거나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되어야 한다.

제 93 조(증거의 수집, 리용)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법이 정한 데 따라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리용할 수 있다.

제 94 조(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증거수집은 군중의 힘에 의거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가 진술을 요구하거나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물건, 문서의 제출과 수색, 압수, 검증, 검진, 심리실험, 식별 같은 형사소송행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95 조(증거의 고착) 수집한 증거는 진술서, 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사진을 찍거나 도면을 그리거나 녹음, 록화 같은 방법으로 고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진술서, 조서에 밝힌다.

제 96 조(증거의 검토)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를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하거나 확인한 다른 증거, 새로 수집한 증거와 대조확인 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 97 조(증거의 평가)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 데 따라 수집하고 검토 확인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 98 조(피심자, 피소자 진술의 평가)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자수, 자백한 자료도 그와 관련있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인정한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 99 조(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 증거물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가에 따라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로 등록, 고착시킨다. 증거물의 특징, 상태, 흔적을 따로 고착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물 검증조서로 고착시킨다.

제 100 조(증거물수집과 립회) 증거물을 찾아내고 고착시킬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 101 조(증거물의 보관) 증거물의 보관은 사건기록과 함께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한다.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보관하기 어려운 증거물은 봉인하여 관계자에게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수집한 현금, 귀금속은 은행의 해당 구좌에 입금시키고 입금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불인다.

제 102 조(증거물의 이관) 형사사건을 다른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에 보낼 경우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준다. 임자 또는 해당 기관에 이미 돌려주었거나 넘겨준 증거물과 이관이 적합하지 못한 증거물은 근거문건을 검증조서와 함께 넘겨준다.

제 103 조(사건종결전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사유)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증거물은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재판소의 판정으로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줄 수 있다. 몰수할 필요가 없는 증거물 가운데서 소유자, 점유자가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재판소의 판정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임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돌려받은 증거물을 형사사건 종결전에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변형시키지 말데 대하여 알려준다.

제 104 조(증거물의 처리방법)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주려는 수사원, 예심원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으며 임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형사사건을 종결하기전에 처리한 증거물은 특징, 상태, 흔적을 검증조서, 사진 같은 것으로 고착하여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5 조(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처리) 형사사건을 종결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증거물을 몰수하며 그밖의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그 사실을 판결서, 판정서, 사건기각결정서, 사

회적교양처분결정서에 밝혀야 한다. 증거물을 돌려받았거나 넘겨받은 피해자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변 호

제 106 조(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 보장)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 107 조(변호인의 임무) 변호인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8 조(변호인의 선정권)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를 가진다. 변호인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의 가족, 친척, 소속단체대표자도 할 수 있다.

제 109 조(변호인의 선정권 포기)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 110 조(변호인의 선정시기) 변호인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사실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제 111 조(재판소의 변호인 선정권) 재판소는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자를 기소하였을 경우 해당 변호사회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 112 조(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으로는 각급 변호사회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변호사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려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변

호인으로 쓸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13 조(변호인의 선정신청) 피심자, 피소자 그의 가족, 친척 또는 소속단체대표자는 예심원, 재판소에 변호인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선정신청을 접수한 예심원, 재판소는 선정된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3일 안으로 신청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 제111조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하려는 재판소는 해당 변호사회에 변호인을 선임할데 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 114 조(변호인의 선정통지) 변호인의 선정신청이나 선임의뢰를 받은 자 또는 변호사회는 그 동의 여부에 대하여 3일 안으로 해당 예심원, 재판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변호인의 선정, 선임동의에 대하여 통지받은 예심원, 재판소는 곧 변호인의 선정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115 조(변호인의 재선정)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변호인의 선정신청, 선임의뢰를 거부하거나 검사 또는 재판소가 변호인의 선정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의 재선정은 이 법 제113조에 따른다.

제 116 조(사선변호의 우선권) 공선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사선변호인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변호인으로 된다.

제 117 조(변호인의 피심자, 피소자담화) 선정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 수 있다. 예심원 또는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

제 118 조(변호인의 사건기록 열람) 변호인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 119 조(변호인의 증거수집)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변호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 확인할 수 있다.

제 120 조(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에 대한 변호) 변호인은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 수 없다. 그러나 피소자들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 수 있다.

제 121 조(변호인의 의견제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또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재판소는 제기받은 의견을 3일 안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5 장 관 할

제 122 조(수사관할)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검찰기관이 한다.

제 123 조(특별수사기관의 관할)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철도부문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검찰기관이 한다. 군인, 인민보안원과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수사

는 군사검찰기관이 한다.

제 124 조(예심관할)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을 예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밑에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심할 수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 사건의 예심은 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 125 조(특별예심기관의 관할) 군사상 범죄사건과 군대안의 일반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군사검찰기관 예심원이 한다.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철도부문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부문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 126 조(인민재판소관할)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 127 조(도재판소관할) 도(직할시)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은 제2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하거

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제 128 조(특별재판소관할) 군사재판소는 군인,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 129 조(중앙재판소관할)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제 130 조(지역관할) 재판소는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재판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는 곳, 적발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제 131 조(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관할에 속한 사건의 재판관할)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의 재판은 그 사건심리를 먼저 시작한 재판소에서 한다.

제 132 조(관할이 다른 사건의 재판관할) 관할이 다른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피소자 또는 관할이 다른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가 상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상급재판소,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한다.

제 133 조(관할분쟁의 금지) 다른 재판소에서 넘겨받은 범죄사건은 다시 다른 재판소에 넘겨줄 수 없다. 넘겨받은 범죄사건이 다른 급 또는 다른 종류의 재판소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상급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그 사건을 넘겨준다.

제 6 장 수 사

제 134 조(수사의 임무) 수사의 임무는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이다.

제 135 조(수사의 시작) 수사할 범죄자료를 얻은 수사원은 곧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 136 조(수사시작결정서의 처리)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 안으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결정서등본을 받은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을 경우 결정으로 수사 시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37 조(수사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138 조(수사의 방법)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중,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앞 항의 행위는 이 법 제7장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제 139 조(관할지역 밖에서의 수사)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의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한다.

제 140 조(수사의 의뢰)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제때에 정확히 수사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제 141 조(수사원의 증거수집제한)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증거수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집할 수 있다.

제 142 조(수사사건의 이송)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을 관할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구금되어있을 경우에는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을 하여야 한다. 수사과정에 알게 된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자료도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 143 조(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 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제 144 조(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이 법 제 143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한 경우

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아야 한다.

제 145 조(구금하지 않은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체포한 범죄 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을 경우 체포일자, 사유 같은 것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구금된 자에게 이 법 제43조의 사유가 나타날 경우에는 구금을 중지하며 제5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금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 146 조(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 사건의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곧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넘겨야 한다. 이 경우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범죄자를 체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제 147 조(수사에 대한 감시)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수사원에게 필요한 수사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 7 장 예 심

제 1 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

제 148 조(예심의 임무)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

사건의 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제 149 조(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 예심원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를 저지른데서는 역할과 책임 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제 150 조(반복조사의 금지) 예심원은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를 검토확인하는 경우 그대로 쓸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히 조사 확증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을 종결한다.

제 151 조(예심의 기간)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끝내야 한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 안으로 끝내야 한다. 예심을 더 하기 위하여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20일 안으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7일 안으로 끝내야 한다.

제 152 조(예심기간의 연장) 이 법 제151조 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8조 1, 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4개월까지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이 법 제151조 2항에 지적된 기간에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153 조(예심사건의 이송) 예심원은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긴급히 필요한 예심을 한 다음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관할예심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

우 피심자가 구류되어 있다면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154 조(관할지역 밖에서의 예심)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 예심을 자기관할지역 밖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한다.

제 155 조(예심의 의뢰)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 예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예심을 의뢰받은 예심원은 그것을 정확히 하고 곧 회보하여야 한다.

제 156 조(예심에 대한 감시)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예심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을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을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예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 2 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 157 조(예심의 시작)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 예심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이 다른 범죄사건은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 158 조(형사책임추궁)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는 예심원의 이름, 결정날자, 피심자의 이름, 적용할 형법조항,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 리유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159 조(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밝혀야 한다.

제 160 조(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결정서등본을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 161 조(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변경, 취소하거나 새로운 형법조항을 추가하여 적용할 사유가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하여 결정하고 곧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 3 절 피심자의 심문

제 162 조(피심자의 심문시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제 163 조(피심자의 심문시간) 피심자의 심문은 8시~20시 사이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 항에 규정된 시간 밖에도 피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 164 조(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심문하려는 예심원은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정당한 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심자를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 165 조(피심자의 호송) 구류한 피심자의 심문은 예심장소에

호송하여 한다. 피심자의 호송은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원이 한다.

제 166 조(피심자의 체포의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체포의뢰결정을 하여야 한다.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는 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령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제 167 조(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의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제 168 조(피심자심문의 개별화)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경우 서로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피심자가 없는 장소에서 피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 169 조(피심자의 권리통고)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 170 조(피심자의 권리) 예심에서 피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지적된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2. 예심원이 추궁하는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히 조사해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예심원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 데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자기의 진술을 심문조서에 직접 쓰거나 심문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71 조(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예심원은 피심자를 심문하는 경우 그에게 범죄에 대하여 먼저 말하게 하고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제 172 조(피심자심문의 립회) 예심원은 필요에 따라 피심자심문에 2명의 립회인을 세울 수 있다.

제 173 조(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병어리, 귀머거리피심자의 심문) 예심원은 조서말을 모르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통역을, 병어리, 귀머거리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자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통역인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심문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다.

제 174 조(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피심자를 심문한 예심원은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피심자에게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

제 175 조(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예심원은 피심자의 심문을 끝내면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하면 거부하고 조서에 밝혀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피심자의 지장을 받아야 한다. 피심자가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다.

제 4 절 체포와 구속처분

제 176 조(체포, 구속처분의 목적) 예심원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피심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77 조(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 구속할 수 없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되어 있는 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제 178 조(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체포,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179 조(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사유) 체포, 구류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

제 180 조(체포의 담당자) 체포는 수사원, 예심원이 한다. 체포령장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제 181 조(체포령장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구금하지 않은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의 승인은 체포령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182 조(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령장을 제시하며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구금된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며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제 183 조(체포, 구속의 통지)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준다.

제 184 조(구속처분의 종류)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류구속처분
2. 자택구속처분
3. 지역구속처분

제 185 조(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든다.

제 186 조(구속처분결정의 승인)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취소하거나 고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 187 조(구류의 기간)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0일,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제 188 조(구류기간의 연장) 이 법 제151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시(구역), 군예심원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여야 할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으로서 이 법 제151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까지 늘일 수 있다.

제 189 조(자택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은 질병, 임신 같은 사정으로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택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며 보증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는다.

제 190 조(지역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에 대하여 예심원 또는 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서약서를 받는다.

제 191 조(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이유를 밝힌 결정으로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그 종류를 바꿀 수 있다.

제 5 절 검 증

제 192 조 (검증, 검진의 목적) 예심원은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며 증거물의 특징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검증하며 사람의 몸에서 범죄사건과 관련된 흔적,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한다.

제 193 조(검증의 종류) 검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현장검증
2. 증거물검증
3. 죽은 사람에 대한 검증
4. 산 사람에 대한 검진

제 194 조(범죄현장에서 증거물검증)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한다.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옮겨놓고 검증할 수 있다.

제 195 조(검증의 동의) 검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자의 동의를 얻어 묘를 파거나 물건을 파괴할 수 있다. 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 196 조(검진결정서의 작성) 사람을 검진하려 할 경우에는 검진결정서를 만든다. 검진결정서에는 검진대상자와 검진리유 같은 것을 밝힌다.

제 197 조(검증, 검진의 시간) 검증, 검진은 낮에 한다. 긴급한 경

우에는 밤에도 검증, 검진을 할 수 있다.

제 198 조(검진결정서의 제시) 검진을 맡은 자는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검진결정서를 검진을 받을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199 조(검증, 검진의 립회) 검증, 검진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녀성에 대한 검진의 립회는 녀성을 시킨다.

제 200 조(검증, 검진에 감정인의 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 수 있으며 법의감정의사에게 검진을 시킬 수 있다. 법의감정의사에게 검진을 시키려 할 경우에는 검진맡김결정서를 만든다.

제 201 조(검증, 검진조서의 작성) 검증, 검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써야 하며 락도와 사진을 붙일 수 있다. 법의감정의사가 검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든다.

제 202 조(심리실험의 사유) 보거나 듣거나 일정한 행위의 가능성여부와 그러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를 검토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실험을 할 수 있다.

제 203 조(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검토확인하여야 할 행위나 현상이 있는 당사와 같은 장소, 시간, 환경,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2. 2명의 립회인을 세우고 여러 번 하여야 한다.
3. 심리실험참가자에게 예심원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제 204 조(심리실험의 금지사유)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이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

에는 심리실험을 할 수 없다.

제 205 조(심리실험조서의 작성) 심리실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심리실험을 한 조건보장정형, 심리실험과정, 결과를 밝힌다.

제 6 절 감 정

제 206 조(감정의 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조사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겨야 한다.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는 의무적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제 207 조(감정의 종류) 감정에는 법의학감정, 법정신병학감정, 법화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탄도학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인물감정 같은 것이 속한다.

제 208 조(감정기관) 감정은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 209 조(감정의 의뢰)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감정맡김결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낸다. 이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넘겨준다. 감정맡김결정서에는 해명할 내용과 감정에 필요한 자료, 감정인의 의무, 허위감정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밝힌다.

제 210 조(감정의뢰에 대한 의무적리행)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며 감정을 맡긴 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 211 조(감정서의 작성과 회보)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

서를 만들어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곧 보내야 한다. 감정서에
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써야 한다. 같은 문제에 대
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212 조(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213 조(감정인의 통고)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누구에게 맡긴
다는 것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214 조(감정인의 심문) 감정을 맡긴 예심원은 감정에서 명백
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여러 감정
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앞
항의 경우 이 법 제233조, 제234조에 따른다.

제 215 조(재감정) 감정에서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였거나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결정으로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 7 절 수색과 압수

제 216 조(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한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
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
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압수는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
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 217 조(수색, 압수의 승인)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
다. 수색, 압수하려는 예심원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8 조(수색, 압수결정서의 제시)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수색, 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219 조(수색장소의 경비조직) 수색장소에는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 수 있다.

제 220 조(수색, 압수의 시간) 수색, 압수는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제 221 조(수색, 압수의 립회) 수색, 압수를 할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수색, 압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체신기관에서 관리하는 편지, 전보 같은 것을 수색,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체신기관의 대표자를, 여성의 몸을 수색할 경우에는 여성을 립회시킨다.

제 222 조(외교적 절차에 의한 수색, 압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외교적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참가하며 대외사업일군과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를 립회시킨다.

제 223 조(압수대상과 방법) 압수는 범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한다. 이 경우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이며 압수당한 자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준다.

제 224 조(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수색, 압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과정에 발견한 물건, 문서의 위치와 상태, 특징, 수량,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

제 8 절 증인의 심문

제 225 조(증인의 자격) 증인으로는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보고 느낀 것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제 226 조(증인의 심문장소) 증인의 심문은 그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 227 조(증인의 소환 및 구인)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와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오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 구인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 228 조(증인의 의무) 증인은 범죄와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예심원의 물음에 정확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 229 조(증인의 권리) 증인은 심문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며 자기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30 조(조선말을 모르는 증인, 병어리, 귀머거리증인의 심문) 조선말을 모르는 자, 병어리,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의 절차는 이 법 제173조에 따른다.

제 231 조(증인심문의 개별화) 증인의 심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한다. 예심원은 증인의 심문이 끝날 때까지 같은 범죄에 대한 증인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 232 조(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의 심문)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에는 교원이나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제 233 조(증인의 심문절차) 증인을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리유,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여 주고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증인이 알고있는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고 그의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 234 조(증인심문조서의 작성) 증인을 심문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174조, 제175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제 9 절 대질심문과 식별심문

제 235 조(대질심문의 사유) 같은 범죄에 대한 여러 진술자의 말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질심문을 한다.

제 236 조(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요구) 대질심문을 하려는 예심원은 해명하려는 문제를 진술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말며 그들이 공모하거나 다른 진술자의 위협이나 거짓진술의 영향을 받아 본의아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기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하여야 한다.

제 237 조(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질문) 예심원은 대면시킨 자의 진술이 끝나면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게 하여야 한다.

제 238 조(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질문권의 보장) 예심원은 대면시킨 자에게 상대방의 말에서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심원의 승인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 239 조(대질심문조서의 작성) 대질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174조, 제175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제 240 조(식별심문의 방법) 범죄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내기 위하여 식별심문을 한다. 식별심문은 식별대상과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물건을 동시에 식별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한다.

제 241 조(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 예심원은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그가 알고 있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서에 밝혀야 한다. 식별과정에 식별자가 어떤 특징에 의하여 아는 사람 또는 물건을 갈라냈는가를 묻고 그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242 조(식별심문의 립회) 식별심문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 243 조(식별심문조서의 작성) 식별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식별자가 증인인 경우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 정형,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알고 있는 대상의 특징을 물어본 정형과 그에 대한 답변, 식별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밝힌다. 필요에 따라 식별자에게 식별한 것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 수 있다.

제 10 절 재산담보처분

제 244 조(재산담보처분의 목적) 이 법에 따라 재산몰수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은 형벌집행을 위하여 재산담보처분을 한다. 재산담보처분은 범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국민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제 245 조(재산담보처분의 대상)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산물수형을 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산
2. 손해보상청구에 책임 있는 피심자 또는 피심자의 범죄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자와 그 런루자의 재산

제 246 조(재산담보처분의 시기) 재산담보처분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 항에 관계없이 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제 247 조(재산담보처분의 범위) 재산담보처분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청구가 제기된 양만큼 한다.

제 248 조(재산담보처분의 절차)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예심원은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은 재산담보처분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249 조(재산담보처분의 방법)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담보처분당하는 자에게 제시하며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제 250 조(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재산담보처분을 한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주어야 한다. 재산보관자에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251 조(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 그것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면 해제 또는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252 조(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재산이 없어

담보처분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조서를 작성한다.

제 253 조(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물건은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하고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우 결정서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 11 절 예심의 종결

제 254 조(예심의 종결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제 255 조(예심의 종결절차)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여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 256 조(검사의 예심종결참가) 예심의 종결수속은 검사의 참가 끝에 한다.

제 257 조(예심종결조서의 작성)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짜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258 조(사건기록과 증거물의 이송)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날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259 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검사의 처리)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피해자,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날부터 7일 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검사는 3일 안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 260 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의 처리) 예심원은 이 법 제259조 제1항의 의견을 제기받았을 경우 48시간 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심은 계속하여야 한다.

제 8 장 기 소

제 261 조(기소의 임무) 기소의 임무는 예심을 종결한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피심자를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다.

제 262 조(기소의 기간)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10일 안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3일 안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제 263 조(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까지이다. 그러나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3일까지이다.

제 264 조(범죄의 사건기록검토내용) 범죄의 사건기록검토에서

중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2. 예심을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3.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제 265 조(피심자의 기소) 검사는 예심을 충분하고 옳게 진행하였을 경우 기소장을 작성하여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내야 한다.

제 266 조(기소장의 작성)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하려는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소장에는 작성날자, 작성자의 직장, 직위,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사정, 인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조항과 기소할 재판소를 밝혀야 한다.

제 267 조(기소장에 첨부할 문건) 기소장에는 재판심리에 참가시켜야 할 피심자와 증인, 감정인의 이름과 사는 곳, 피심자를 구류한 날자와 구속되어 있는 곳,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인다.

제 268 조(예심의 반송) 검사는 예심이 불충분하게 되어 기소할 수 없을 경우 그것을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제 269 조(반복기소의 금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

제 9 장 제1심 재판

제 1 절 재판의 임무와 재판소구성

제 270 조(제1심재판의 임무) 제1심재판의 임무는 법에 따라 재판관계자의 참가밑에 범죄사건을 심리하며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범죄와 범죄자를 정확히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제 271 조(재판의 공개) 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 272 조(재판의 독자성 보장)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그것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 273 조(확정사실의 인정) 형사재판 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이 범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확정한다.

제 274 조(제1심재판소의 구성) 제1심재판은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하고 제1심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심재판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 275 조(재판소성원의 고착과 교체) 같은 범죄사건의 재판은 처음 구성하였던 재판소 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를 하다 재판소 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 276 조(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의 참가)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밑에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

하였거나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검사나 변호인의 참가없이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제 277 조(재판심리에서 재판장) 재판장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제 278 조(재판심리에서 검사)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

제 279 조(재판심리에서 변호인)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0 조(재판정의 좌석배치) 재판소성원은 재판정의 가운데, 검사와 변호인은 서로 마주한 자리를 차지한다. 재판서기는 재판소성원의 옆에, 피소자는 재판소성원과 마주한 자리를 차지한다.

제 281 조(피소자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재판심리의 참가를 거부하는 피소자는 구인 또는 구류하여 재판한다. 피소자의 구인 또는 구류절차는 이 법 제164조, 제182조~제185조에 따른다.

제 282 조(재판을 위한 구류기간) 재판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5일까지이다. 그러나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5일까지이다.

제 283 조(재판정에서 피소자구속금지) 재판정에서 피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반항하거나 도망치려는 피소자를 구속할 수 있다.

제 284 조(피소자의 의무) 재판심리에서 피소자는 물음에 답변하며 재판장의 승인없이 재판정에서 떠날 수 없다.

제 285 조(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 경우)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 286 조(현지재판의 조직)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

제 287 조(제1심재판기간) 제1심재판소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으로 재판심리를 끝내야 한다.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피소자에 대한 재판심리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내야 한다.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재판심리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 288 조(재판에 대한 검사의 감시)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 2 절 재판준비

제 289 조(재판준비의 담당자) 사건기록을 접수한 재판소는 재판준비를 한다. 재판준비는 재판을 맡은 판사가 한다.

제 290 조(사건기록의 검토내용) 재판준비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가.
2. 기소에 근거가 있는가.

3. 인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었는가.
4. 근거없이 범죄의 공모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5.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6. 피심자의 신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 피심자의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 291 조(범죄현장과 증거자료의 확인) 판사는 현지에서 재판심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가 범죄현장과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제 292 조(범죄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 판사는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어 재판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기소된 범죄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기소한 형법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긴다.

제 293 조(범죄사건의 반송판정) 재판심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심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기소장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 294 조(범죄사건의 이송판정) 사건기록을 접수한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은 사건이송판정을 한다.

제 295 조(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할 경우에는 재판날자, 장소, 재판심리에 참가시킬 증인, 감정인과 재판심리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겠는가를 정한다.

제 296 조(재판준비에서 검사의 의견처리)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이 법 제44조,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293조, 제294조에 따라 판정하려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의를 위하여 검사가 요구하는 판정서등본은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보내야 한다.

제 297 조(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한 검사의 항의)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검사는 상급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2조에 따른다.

제 298 조(기소장 및 판정서등본의 송달)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 전에 피소자에게 기소장등본과 판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기소된 형법조항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전에 피소자와 변호인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 299 조(재판심리날자의 통지)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 전에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재판심리날자를 알려야 한다. 증인, 감정인에게는 소환장을 보낸다. 재판심리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한다. 앞 항의 경우 구인절차는 이 법 제227조에 따른다.

제 300 조(신청, 의견의 처리) 피심자가 기소된 다음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재판소만이 해결한다. 재판심리가 있기 전에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재판준비를 맡은 판사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 3 절 재판심리

제 301 조(제1심재판의 절차) 제1심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

- 리, 론고와 변론, 피소자의 마지막 말, 판결의 선고절차로 한다.
- 제 302 조(제1심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기소장등본접수 정형과 체포(구류)날자를 묻고 재판에서 그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 제 303 조(재판관계자로부터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피소자와 재판관계자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주고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 제 304 조(오지 않은 증인, 감정인의 통고)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소환한 증인, 감정인이 오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피소자와 재판관계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새 증거를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묻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 제 305 조(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이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검사가 기소장을 읽는다. 검사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서기가 기소장을 읽는다.
- 제 306 조(기소사실의 인정확인)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 제 307 조(심리순서의 확정)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인민참심원과 합의하여 심리순서를 정한다. 정한 심리순서는 재판정에 알린다.
- 제 308 조(피소자의 심문순서) 피소자에 대한 심문은 먼저 피소자에게 자기 범죄를 말하게 한 다음 재판소가 정한 순서에 따라 한다.
- 제 309 조(피소자의 개별심문)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심리하는 재판소는 범죄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여 피소자를 한 사람씩 재

판정에 불려다 심문할 수 있다.

제 310 조(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의 처분)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는 판정으로 재판정에서 내보내고 사실심리를 한다. 이 경우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제 311 조(증인심문의 시작)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1명씩 재판정에 불려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 피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게 한다.

제 312 조(증인심문의 순서)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심문할 것을 요구한 자가 먼저 심문하게 한다. 앞 항에 지적된 자의 심문이 끝나면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장의 승인을 받고 증인을 심문한다.

제 313 조(재심문 또는 대질심문)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필요에 따라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 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과 증인, 증인과 피소자를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의 심문절차는 이 법 제232조에 따른다.

제 314 조(심문받은 증인의 처리) 심문받은 증인은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 재판소를 떠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문받은 증인을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재판소에서 내보낼 수 있다.

제 315 조(증인심문의 중지) 사실심리에서 범죄가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인심문을 그만둘 수 있다.

제 316 조(재판심리에 감정인의 참가) 감정인은 감정을 시킬 경우에만 사실심리에 참가시킨다. 필요에 따라 감정인을 처음부터 사실심리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 317 조(감정의뢰와 감정인의 심문)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감정을 맡기거나 감정인의 심문절차는 이 법 제213조, 제214조에 따른다. 감정인에게는 감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감정결과를 말하게 한다.

제 318 조(재감정) 재판소는 감정결과에 부족점 또는 의문이 있거나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다시 시킬 수 있다.

제 319 조(증거물과 증거문서의 검토)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철저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재판관계자는 사실심리과정에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조사검토할 수 있다.

제 320 조(예심조서의 검토방법)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사실심리에서 예심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다.

제 321 조(현장검증, 증거자료의 확인) 재판소는 범죄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범죄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앞항의 검증 또는 증거자료의 확인은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장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작성하며 그것은 사실심리에서 검토되어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 322 조(새 증거의 수집) 증거를 더 수집하려는 재판소는 사실심리를 중지하고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직접 증거를 수집

할 수 있다.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 323 조(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사실심리에서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거심리를 끝내고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다. 재판장은 손해보상청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게 손해보상청구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피소자에게 답변하게 한다.

제 324 조(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인민참심원에게 심리할 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관계자를 사실심리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 325 조(론고와 변론의 순서)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나면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게 한다. 필요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326 조(론고의 내용) 론고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규탄하고 그것이 유죄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론증하며 기소된 형법 조항의 형벌을 적용할 것을 제기한다.

제 327 조(변론의 내용) 변론은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과 목적, 위험성정도, 피소자의 개준성정도를 근거있게 밝히면서 형벌량정에서 참작하여줄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피소자의 행위가 무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로 되는 근거를 정확히 밝힌다.

제 328 조(보충론고와 변론)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

호인이 보충적으로 론고와 변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 329 조(론고와 변론의 기초) 론고와 변론은 재판심리에서 검토확인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 330 조(피소자의 마지막 말)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을 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피소자의 마지막 말에서 범죄사건의 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판심리를 다시 한다.

제 331 조(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피소자의 마지막 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

제 332 조(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소된 범죄가 있었는가.
2. 범죄를 피소자가 저질렀는가.
3. 범죄의 표징을 갖추었는가.
4. 피소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5. 손해보상청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증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7.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8.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 4 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 333 조(기소의 추가사유) 기소의 추가는 이미 기소된 범죄 밖에 피소자에게 형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새로운 범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형벌을 무겁게 줄 수 있는 새로운 범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 334 조(기소의 추가시기) 기소의 추가는 제1심재판의 준비에서 한다. 재판심리에서도 기소의 추가를 할 수 있다.

제 335 조(기소의 추가절차) 재판소는 발견한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 사건반송판정서에 지적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돌려보내며 범죄는 밝혀져 있으나 형법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기소를 추가한 다음 재판심리를 계속한다.

제 336 조(기소의 변경사유) 기소의 변경은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형벌을 가볍게 줄 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피소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형법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 337 조(기소변경의 시기) 기소의 변경은 제1심재판의 준비와 재판심리에서 한다. 제2심재판심리에서도 기소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제 338 조(기소의 변경절차) 재판소는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형벌을 가볍게 줄 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기소된 범죄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가볍게 줄 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으로 고친 다음 계속 심리하여 판결한다. 기소된 범죄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무겁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피소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재판심리를 10일까지 미룰 수 있다.

제 339 조(새 범죄자에 대한 처리)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피소

자가 아닌 다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한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범죄사건을 수사 또는 예심에 넘기는 판정을 하여 검사에게 보내거나 다른 제재를 주는 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처분판정을 할 수 있다.

제 5 절 판 결

제 340 조(판결의 조건)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제 341 조(판결채택의 참가성원) 판결의 채택에는 재판심리를 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 342 조(판결, 판정의 채택) 판결과 재판심리에서 하는 판정의 채택은 재판소 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 판정을 할 때 읽지 않는다.

제 343 조(판결의 종류) 재판소는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한다.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사회적교양처분을 하는 판결은 유죄판결이며 그에게 범죄가 없다는 판결은 무죄판결이다.

제 344 조(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경우에는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을 한다. 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제 345 조(사회적교양에 넘기는 판결) 재판소는 이 법 제6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을 하는 판결을 한다.

제 346 조(무죄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가 없었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한다.

제 347 조(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한다.

제 348 조(피소자의 석방) 구류되어 있는 피소자에게 무죄판결, 형벌을 면제하거나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회적교양처분을 하는 판결 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를 곧 놓아준다. 중앙검찰소 소장과 중앙재판소 소장은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제외한 앞 항의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349 조(증거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판결, 판정을 한 경우 범죄의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105조에 따른다.

제 350 조(손해보상청구의 해결) 손해보상청구의 해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손해보상청구가 정당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2. 범죄가 없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기각한다.
3.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 351 조(사건반송의 판정) 재판소는 판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심에서 범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의 원칙과 절차를 심하게 어겼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 352 조(사건반송의 금지) 다른 증거를 더 수집하지 않아도 이미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반송할 수 없다.

제 353 조(판결서의 작성) 판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판결서의 첫 부분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국호와 재판날자,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과 그에 대한 증거의 설명, 손해보상청구와 그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그 밖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를 밝힌다. 판결서의 다음 부분에는 피소자에게 범죄가 있거나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에게 적용하는 형법조항과 형벌 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한데 대하여 지적하며 손해보상청구, 증거물, 재산담보처분, 구속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쓴다. 판결서에는 상소절차를 지적한다.

제 354 조(판결서, 판정서등본의 송달) 재판소는 판결,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보내주어야 한다.

제 355 조(재판조서작성기간과 조서의 열람)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 안으로 재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관계자는 재판조서 작성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 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으며 수정, 삭제, 보충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경우 재판서기에게 고치게 하며 부당할 경우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 356 조(재판조서의 작성) 재판조서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날자, 장소
2.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피소자의 이름, 신분관계
5.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 사는 곳
6. 재판심리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행위
7. 재판관계자가 제기한 의견과 신청
8. 재판심리에서 재판소가 내린 판정
9. 론고와 변론의 내용
10. 피소자가 한 마지막 말

제 357 조(상소, 항의제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

제 358 조(검사의 항의관할) 시(구역), 군검찰소 검사는 해당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도(직할시)검찰소 검사는 해당 도(직할시) 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특별검찰소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 중앙검찰소 검사는 각 도(직할시) 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하급검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59 조(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정)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 항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재판소 제1심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

2.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

제 360 조(집행의 중지) 상소, 항의가 제기된 판결, 판정은 집행하지 않는다.

제 361 조(상소의 제기 및 수속) 상소를 하려는 자는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소장을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1심재판소는 상소기간이 지나면 곧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상급재판소에 보내야 한다. 상소, 항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소, 항의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여줄 수 있다.

제 362 조(항의의 제기 및 수속) 항의하려는 검사는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항의서를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1심재판소는 항의기간이 지나면 곧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항의한 검사의 상급검찰소에 보내야 한다. 항의서를 접수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같은 급의 재판소에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거나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63 조(판결, 판정의 확정) 판결, 판정이 확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소, 항의기간이 지났을 경우
2. 제2심재판소에서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지지하였을 경우
3.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정을 내렸을 경우

제 10 장 제2심재판

제 364 조(제2심재판의 임무) 제2심재판의 임무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

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다.

제 365 조(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 366 조(제2심재판의 기간) 제2심재판소는 상소, 항의된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으로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제 367 조(제2심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 참가) 제2심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변호인이 상소한 경우 변호인을 참가시킨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변호인이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제 368 조(사건기록의 발송, 검토기간)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전에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10일간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제 369 조(재판날자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날자를 재판하기 3일 전에 검사,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370 조(제2심재판심리의 범위) 제2심재판심리에서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된 부분의 내용심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심 또는 제1심재판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심히 어겨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되지 않은 사실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검토한다.

제 371 조(제2심재판심리의 절차) 재판장은 재판심리시작을 알리고 제1심재판소가 재판한 범죄사건의 내용과 판결, 판정, 그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 이유를 보고하고 검사, 변호인, 재판소 성원들에게 의견을 말하게 한다.

제 372 조(제2심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제2심재판심리를 끝낸다는 것을 알린 다음 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판소성원들과 합의실에서 협의한다.

제 373 조(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상소 또는 항의에 근거가 있는가.
2. 인정한 사실과 그에 적용한 형법조항이 맞는가.
3.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4.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제 374 조(판정의 채택) 합의실에서 협의하여 판정을 하면 재판장은 재판정에서 그것을 읽는다. 판정서를 읽을 때 검사도 참가한다.

제 375 조(제1심 판결, 판정의 지지)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게 채택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 376 조(범죄사건의 반송판정) 제2심재판소는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범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인정한 사실과 맞지 않게 형법조항을 적용하였거나 형벌을 정하였을 경우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이 경우 범죄사건을 어느 단계부터 다시 심리하라는 것을 지적한다.

제 377 조(범죄사건의 이송판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관할을 어기고 채택한 판결, 판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범죄사건

을 해당 재판소에 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 378 조(범죄사건의 기각판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기각하여야 할 범죄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기각한다.

제 379 조(판결의 변경) 제2심재판소에서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직접 고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1심재판소가 적용한 형법의 조항보다 가벼운 조항으로 고치는 경우
2. 제1심재판소에서 정한 형벌보다 형벌을 가볍게 고치는 경우
3. 제1심재판소에서 부가형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제 380 조(반송사건에 대한 재판심리) 제2심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을 접수한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 381 조(불이익변경의 금지와 허용) 상소에 근거하여 판결이 취소된 범죄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1심재판소는 처음 판결을 한 재판소가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형벌이 가볍다고 항의한 범죄사건으로서 처음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범죄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재판소가 해당한 형벌을 줄 수 있다.

제 382 조(부대판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심 또는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판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 383 조(재판결과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을 끝낸 날부터

2일 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 11 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제 1 절 비상상소심

제 384 조(비상상소심의 임무) 비상상소심의 임무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 385 조(비상상소심 재판소의 구성) 중앙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 386 조(비상상소심의 기간) 중앙재판소는 비상상소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심리 해결하여야 한다.

제 387 조(판사회의)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성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판사회의의 판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회의에 참석한 성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한다.

제 388 조(검사의 비상상소심참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 389 조(비상상소의 제기자)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 390 조(비상상소의 제기기간) 비상상소의 제기기간은 제한하

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비상상소는 판결을 받은 자가 죽은 다음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제 391 조(비상상소의 제기사유) 비상상소의 제기는 범죄사건의 처리에서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사건기록에 나타났을 경우에 한다.

제 392 조(비상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사건) 형벌집행이 끝난 범죄사건에 대하여 이미 집행한 형벌이 낮다는 이유로 비상상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높이 주어야 할 형벌에 해당하는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난 범죄사건은 비상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93 조(비상상소의 제기신청) 지방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비상상소를 제기할 범죄사건은 해당한 의견을 붙여 사건기록을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 394 조(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요구) 중앙재판소 소장 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범죄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비상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건기록은 곧 돌려보낸다.

제 395 조(판결, 판정, 집행의 정지) 중앙재판소 소장 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해당 재판소를 통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제 396 조(비상상소의 제기) 중앙재판소 소장 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제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비상상소제기서를 만들

어 사건기록과 함께 중앙재판소에 보낸다. 중앙재판소 소장이 제기한 비상상소사건은 비상상소심을 하기 전에 사건기록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제 397 조(비상상소심날자의 통지) 중앙재판소는 비상상소심날자를 재판하기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 398 조(비상상소심의 범위) 비상상소심에서는 비상상소제기사유에 근거하여 범죄와 그것을 증명한 증거가 맞는가,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어긴 것은 없는가,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같은 판결, 판정의 합법성, 근거성을 전면적으로 심리해결한다.

제 399 조(비상상소의 심리절차) 비상상소심은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 400조(비상상소사건의 처리)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이 법 제375조~제379조에 따라 범죄사건을 처리한다.

제 401 조(판정의 집행시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 402 조(비상상소심결과의 통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비상상소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 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내주어야 한다.

제 2 절 재 심

제 403 조(재심의 임무) 재심의 임무는 새로운 범죄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다.

제 404 조(재심재판소의 구성)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

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 405 조(재심의 기간)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심리해결 하여야 한다.

제 406 조(검사의 재심참가) 재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 407 조(재심의 제기자) 재심은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 408 조(재심의 제기기간) 재심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은 판결을 받은 자가 죽은 다음에도 할 수 있다.

제 409 조(재심제기의 사유) 재심제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하였던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이 알려진 경우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재판할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새로 알려진 경우

제 410 조(재심제기의 신청) 재심제기의 신청은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 항의 신청을 접수한 검사는 1개월 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근거가 있을 경우 사건기록과 함께 조사자료를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재심제기를 검사가 할 경우에도 앞 항에 따른다.

제 411 조(판결, 판정 집행의 정지엄금)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건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필요에 따라 중앙재판소 소장을 통하여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412 조(재심의 제기와 거부)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의 제기

신청이 정당할 경우 재심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중앙재판소에 보낸다. 재심제기신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을 돌려보낸다.

제 413 조(재심기일의 통지) 중앙재판소는 재심날자를 재판하기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 414 조(재심의 범위) 재심에서는 재심제기의 사유로 되는 범죄를 전면적으로 심리확정하면서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형벌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하는 것을 심리해결한다.

제 415 조(재심사건의 심리) 재심은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 416 조(재심사건의 처리) 중앙재판소는 재심의 제기가 정당할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예심원에게 돌려보내여 다시 예심하게 하거나 직접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판정을 한다. 이 경우 재심을 신청한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48시간 안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 417 조(판정의 집행시기)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 418 조(재심결과의 통지)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제 12 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 419 조(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제 420 조(집행문건의 발송) 재판장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집행문건을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 421 조(판결, 판정집행의 감시)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사형판결의 집행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 422 조(사형의 집행기관) 사형판결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 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한다. 사형집행지휘문건은 해당 재판소가 발급한다.

제 423 조(사형집행결과의 회보)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결과를 3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제 424 조(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집행)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의 집행은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판결, 판정확정통지서를 보내어 한다.

제 425 조(형기의 계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의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한다.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계산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받고 있는 자가 형벌집행기관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형벌집행기간으로 계산한다.

제 426 조(선거권박탈형의 집행) 선거권박탈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시, (구역)군인민위원회가 한다.

제 427 조(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의 집행)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한다.

제 428 조(재산몰수형의 집행) 재산몰수형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재산몰수목록은 사건기록에 붙이고 몰수당한 자에게는 재산몰수목록등본을 준다.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제 429 조(손해보상재산의 집행)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제 430 조(재산의 강제집행) 재산임자가 재산몰수형,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한다.

제 431 조(형벌집행의 정지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임신한 녀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 형벌집행을 정지받은 자의 관리는 이 법 제43조~제52조에 따른다.

제 432 조(만기전석방의 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을 개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만기전에 석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은 15년, 유기로동교화형과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에 한다.

제 433 조(형벌집행의 기각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 걸렸거나 죽은 경우에는 형벌집행을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의감정을

한다.

제 434 조(형벌집행의 정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제기) 무기로 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집행을 정지, 기각시키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데 대한 제기는 형벌집행기관의 책임자가 해당 검찰소 소장에게 한다. 검찰소 소장은 제기 받은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그것을 부결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 435 조(형벌집행의 정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심리) 무기로 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집행을 정지 및 기각시키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는 것은 해당 재판소가 심리 해결한다.

제 436 조(형벌집행정지의 해제) 해당 재판소는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의 형벌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것을 해제하는 판정을 한다. 형벌집행정지기간은 형벌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 437 조(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정지중에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 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정지중에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이 법 제29조에 따른다.

제 438 조(판결, 판정집행과 관련한 신청의 심리날자통지)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심리날자를 3일 전에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 439 조(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법무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법무자료 제264집〉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2005년 7월 일 인쇄

2005년 7월 일 발행

발행처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전화 (02)507-0314
팩스 (02)507-0315

인쇄 문중인쇄주식회사
전화 (02)503-7764~5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405-01